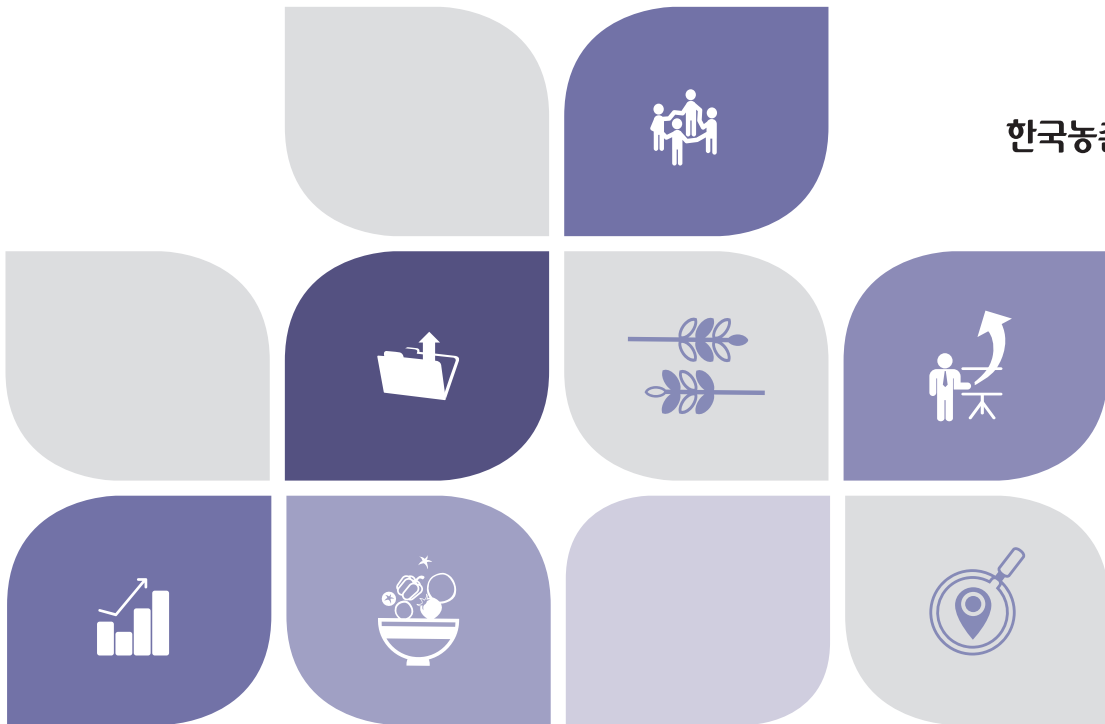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정도채 연구위원

김용욱 전문연구원

김태완 전문연구원

민경찬 연구위원

정유리 연구위원

김민석 연구위원

나현수 연구위원

하혜지 연구위원

구본아 연구조원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 11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 1.1.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5
- 1.2.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29
- 1.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39
- 1.4. 사전협의제도 도입 및 제도화 지원 42

2. 조사·연구 업무

-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51
- 2.2. 삶의 질 심층연구 65
 - 2.2.1. 농촌지역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활용 방안 66
 - 2.2.2.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확산 방안 68



2.2.3.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편 방향 연구	71
2.2.4. 농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74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76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85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88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90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¹⁾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이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²⁾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과 활동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³⁾의 수립·변경 심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을 담당한다.

1) 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 한다.

2)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 한다.

3)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 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 2014.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6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 실적 및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발표
- 2015. 7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
- 2016. 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2016.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17.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9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등 심의
- 2020. 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대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20.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의 환경 및 주민의 정책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DB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그 외에도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3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15년 ~ 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 ▶ **2016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 ▶ **2017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7년 12월 13일)
- ▶ **2018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7개 부문)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8년 12월 19일)
- ▶ **2019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19년 7월 2일)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2019년 9월 24일~26일)

- ▶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20년 ~ 2024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101호(2020년 2월 28일)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사전협의제도 도입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2020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0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제26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0년 6월 30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삶의 질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의 전담부서를 2015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지원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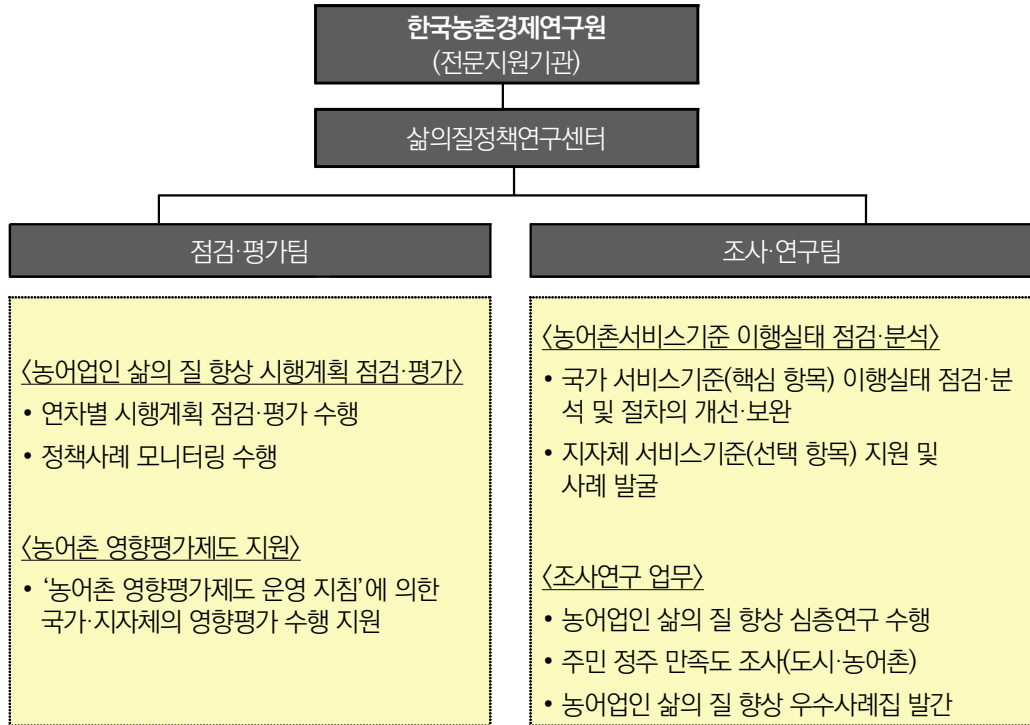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을 ‘삶의질정책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 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로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 등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서비스기준 4대 부문 19개 핵심 항목에 대해 부문별 세부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이와 연계된 지역 정책을 발굴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 운영)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심층연구 수행, 정책 과제 발굴 등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 경험과 성과를 확산시킨다.

- (기타 지원 업무)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삶의 질 이야기 포스터 발간 등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1. 정책 점검 · 평가 입무

1.1.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2.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1.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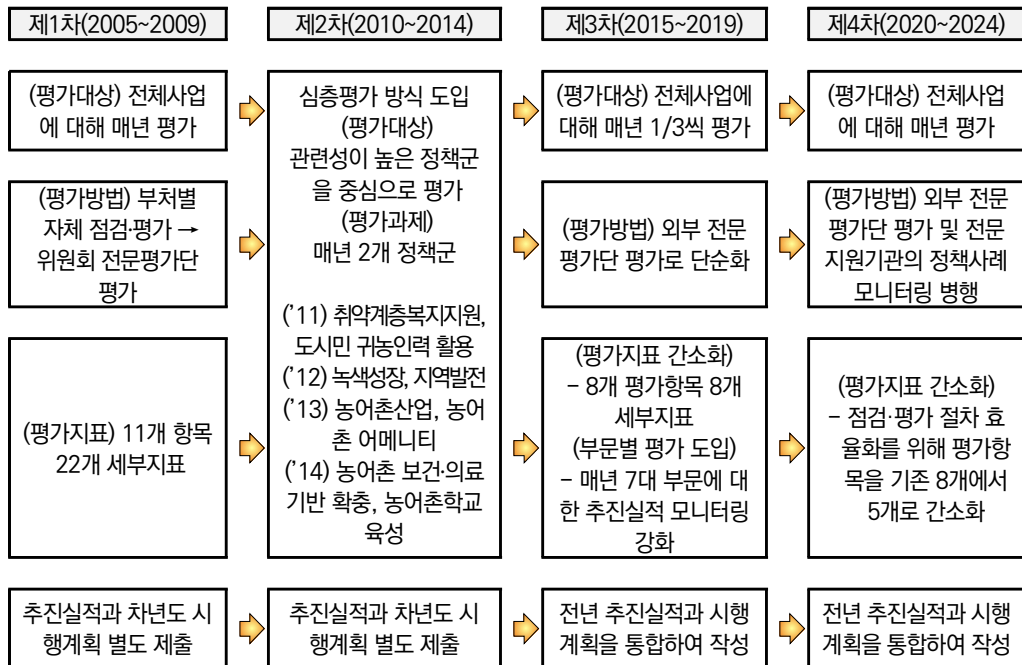
1.4. 사전협의제도 도입 및 제도화 지원

1.1.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개요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당해 연도 계획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6조).
-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 세부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며, 기존 기본계획(1~3차) 평가체계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제4차(‘20~‘24) 기본계획 기간의 평가방법을 개편하였다.

〈제1~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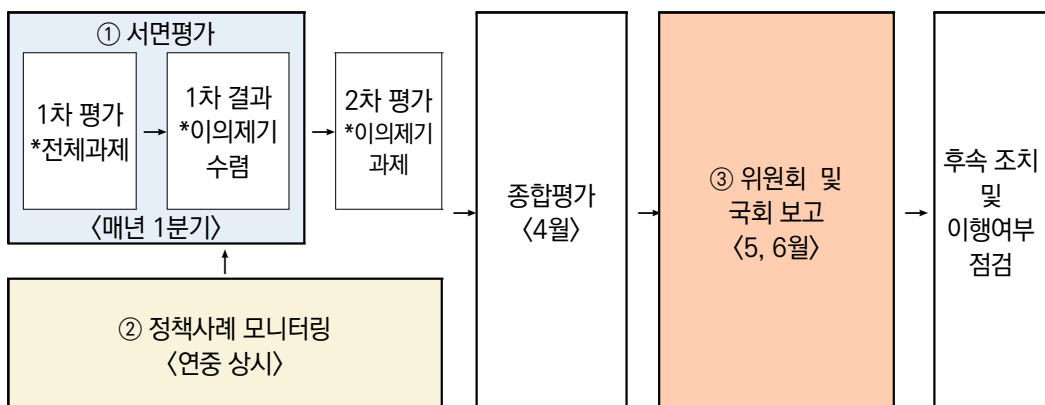




❖ 평가 방법

- (점검·평가 방식)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서면평가와 정책사례 모니터링으로 구성되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추진하였다.
- (평가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참여 전문가,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36인의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 (서면평가) 각 부처별 제출 자료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과제당 평가위원 3명이 그룹평가 실시 후 과제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
 - 위원별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평가과제를 배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별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 (종합평가) 과제별 평가 결과와 KREI 연구진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부문별 분과위원장이 종합평가 의견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전문지원기관의 연구진이 정책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및 문헌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행계획 점검·평가 흐름도〉



- (평가지표) 기존 8개 평가 항목을 5개로 간소화하며, 향후 정책 개선 필요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기 위해 ‘4. 삶의 질 영향력’ 지표를 신설하였다.

〈제3차 시행계획 평가지표〉

〈제4차 시행계획 평가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1. 계획 (35)	1-1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15	• 제3차 기본계획상의 부분별 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업목표의 적합성
	1-2 추진방식의 합리성	10	• 세부 추진체계의 현실 적합성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10	• 성과 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치의 적절성
2. 집행 (15)	2-1 집행 및 예산 확보	10 (0)	• 예산 집행 실적 및 내년도 예산 확보
	2-2 일정 관리	5 (15)	• 추진 일정 준수
3. 성과 (50)	3-1 성과 목표 달성도	20	• 성과 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3-2 삶의 질 향상 기여도	2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3-3 기타 정책효과	10	• 정책 환류 노력도, 언론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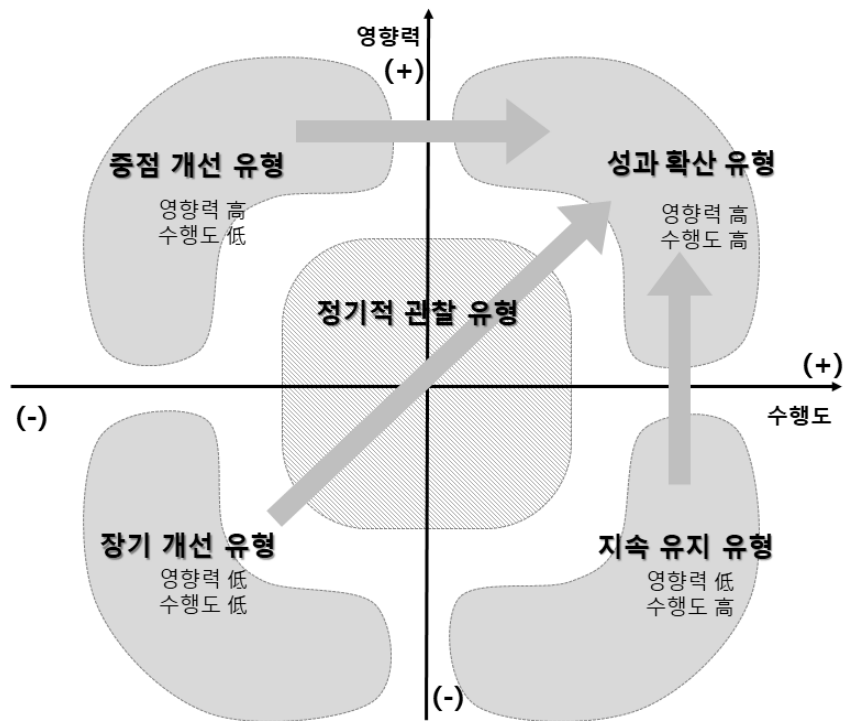
⇒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 4차 기본계획 목표와 비전에 적합한가 • 내용 및 추진방식이 현실에 적합한가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고, 충실히 추진되었는가
2. 성과 (50)	2-1 성과 지표 달성(정량)	20	• 성과 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고, 계획된 목표가 원활히 달성되었는가
	2-2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정성)	30	•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3. 환류 (10)	3 정책개선 노력도	10	• 관련기관, 정책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현장소통 및 의견수렴을 하였는가
4.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1~5 등급	• 해당 과제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

- 과제의 영향력(Influence)과 수행도(Performance) 개념을 도입하여 과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 '20년도 점검·평가 세부 과제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영향력과 수행도 값을 표준화한 z점수(z-score)이기 때문에 각 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대적 비교만 가능하다.
 - [성과 확산 유형](영향력 +, 수행도 +): 삶의 질 우수 정책 과제에 대한 사회 이슈화 및 우수사례 전파가 필요한 유형을 의미한다.
 - [중점 개선 유형](영향력 +, 수행도 -): 정책 실적 제고를 위한 중점적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 [장기 개선 유형](영향력 -, 수행도 -): 과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개선 추진이 필요한 유형이다.
- [지속 유지 유형](영향력 -, 수행도 +): 정책 실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삶의 질 기여도의 점진적 제고가 필요한 과제들이 모인 유형이다.
- [정기적 관찰 유형](영향력 및 수행도 1표준편차 이내):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취지 및 성과 개선 추진이 필요한 유형이다.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개념도〉



❖ 평가유형별 특성

- 평가 결과 수행도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각 유형별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성과 확산 유형은 계획·집행, 성과, 환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 중점 개선 유형은 계획·집행에 비해 성과 항목 점수가 낮았다.
 - 장기 개선 유형의 경우 계획·집행, 성과, 환류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과제별 점수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
 - 지속 유지 유형은 다른 항목에 비해 계획(사업목표, 내용적합성) 항목 점수가 다소 낮았다.
 - 정기적 관찰 유형은 항목별 평가 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각 유형의 항목별 평가 결과 특성〉

항목	구분	배점	성과확산	중점개선	장기개선	지속유지	정기적 관찰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점수	20	19.4	18.4	17.9	18.5	18.9
	표준편차		(0.65)	(0.62)	(1.31)	(0.47)	(1.1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점수	20	19.6	18.0	18.7	19.6	19.0
	표준편차		(0.52)	(1.01)	(1.55)	(0.42)	(1.37)
2-1. 성과 지표 달성	점수	20	19.4	17.0	17.2	18.8	18.3
	표준편차		(0.72)	(1.65)	(1.65)	(0.98)	(1.56)
2-2.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점수	30	28.1	24.2	24.0	27.6	26.3
	표준편차		(1.25)	(1.57)	(1.35)	(1.11)	(2.00)
3. 정책개선 노력도	점수	10	8.6	7.1	7.0	7.9	7.5
	표준편차		(0.67)	(0.82)	(0.92)	(0.79)	(0.85)
합계	점수	100	95.1	84.7	84.7	92.4	90.7
	표준편차		(2.54)	(2.43)	(4.11)	(2.10)	(2.61)

❖ 유형별 주요 평가 의견

- [성과 확산 유형] 삶의 질 영향력과 수행도가 모두 높은 과제이므로,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20년 시행계획 과제 178개 중 성과 확산 유형에 포함되는 과제는 40개이다.
 - 성과 확산 유형에 포함된 과제들의 수행도 평균은 95.1점, 표준편차는 2.54이며, 영향력의 평균은 4.9 등급, 표준편차는 0.16이다.



- [20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우수과제 선정] 시행계획 점검·평가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우수과제 선정기준을 정하고 성과 확산 유형에 포함된 과제 중에서 위원회에 보고할 18개 우수과제를 선별하였다.
 - 삶의 질 영향력 및 수행도 점수가 모두 전체 과제의 평균보다 표준편차 1.0이상 높은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 부문 5개 과제, 교육·문화 부문에서 4개 과제, 정주생활기반에서 7개 과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 2개 과제가 우수과제에 포함되었다.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비고	
보건 복지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복지부)	94.7	5.0	농어촌 응급의료 확충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 거점병원과 취약지역 간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며, 사업 확대가 필요	
	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소방청)	91.0	5.0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출동태세를 갖추는 사업으로 중요도가 높으며, 구급차량 배치를 계획기간 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업안전 보건센터운영)	91.7	5.0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운영 목적과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며, 농촌진흥청의 안전사고예방실천사업과 결합한 사업 추진 방안 검토 필요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91.0	5.0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어업안전보건센터의 운영 목적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확충과 사업예산의 확대가 필요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91.7	5.0	농어업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하며, 센터의 관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라 보건소인 점은 개선이 필요	
	1-2-1-1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91.0	5.0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모형 개발 단계로 실제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가 크고 지자체 추진 의지가 차이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95.7	4.7	영농도우미와 행복도우미는 사업목표, 대상 집단의 성격, 수요 분포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에 적합한 세부계획과 별도의 성과지표 필요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5.7	5.0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귀농인이나 다문화 가구 등 소외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집중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우수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비고	
보건 복지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7.7	5.0	만족도와 요구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사업으로,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한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필요. 단, 남성 농업인의 가입률이 낮아 가입 독려 필요	우수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95.0	5.0	어업인 복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 성과 우수	우수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5.7	5.0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농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농업 기계화 등의 농작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제도 개선 필요	우수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97.7	4.7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형태의 과제로 도시근로자와 농가 소득 격차 및 농가의 경제 불안정 심화, 농어촌의 지역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 등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설계 구성이 적절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8.0	5.0	기후 위기 및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상재해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	우수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여성경영주 등록확대)	92.3	5.0	농업이 직업인 여성들도 모성보호와 직업인으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이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농가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필요	
교육 문화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92.7	5.0	농어촌 지역 환경에 맞게 통학수단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발달권, 보호권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업이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필요	
	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95.3	5.0	농어촌 지역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향후 농어촌 학생에 대한 진로 교육 내실화를 위한 멘토링 방안 등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	우수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92.0	5.0	학생들의 이수 다양성을 위한 고교학점제는 농어촌지역에선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원 체계는 농어촌 교육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95.0	5.0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양적 효과가 있는 사업,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 필요	우수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96.7	4.7	문화취약지역 가산점 부여로 농어촌이 우선 선정되도록 배려하였으며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지원이 부족하여 전국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확대가 필요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96.3	5.0	지역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문화 향유가 가능하려면 동호회가 필요하며 사업의 양적 확대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	우수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8.3	5.0	농어촌 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한 중요 사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미래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향후 사업 확대 필요	우수
	2-4-2-3	농촌축제 지원	96.3	4.7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비고	
정주 생활 기반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6.3	4.7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필수적이며,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향후 사업지역 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3-1-1-3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96.0	4.3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과 도시 외곽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사업 수급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활용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3-1-2-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94.7	5.0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수적 사업이며,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농촌진흥청·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	
	3-2-1-3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91.3	5.0	농어촌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슬레이트 없는 농어촌을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관리체계 마련 필요	
	3-2-1-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92.0	5.0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으로 점진적인 규모 확대 필요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98.3	5.0	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 향후에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	우수
	3-2-2-3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96.0	5.0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성과 제고와 확산을 위한 홍보가 필요	우수
	3-2-2-4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6.0	5.0	사업의 성과목표는 기달성하였으나, 농어촌 지역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속 추진 필요	우수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97.0	5.0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ICT 활용 등 고도화 방안 마련 필요	우수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6.7	5.0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우수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100.0	5.0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며, 사업 추진이 적절하게 잘 운영	우수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	97.0	5.0	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 체계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우수	
경제 일자리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6.3	5.0	사업 추진 성과는 우수한 편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해 성과 확산 필요	우수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7.7	4.7	소득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며, 위생관리 강화, 담당자 처우개선 및 지방비 이양에 따른 관리 체계화 지원 등 사업 성과 우수	
	4-3-1-3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94.7	5.0	사업 내용이 청년들의 영농창업 역량을 제고하는데 적합하며, 임차인 병역요건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적 우수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7.7	5.0	농촌 지역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며, 영농정책을 향상 및 청년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	우수
	4-3-2-2	귀어귀촌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육성)	90.3	5.0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삶의 질 계획 취지에 부합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세 개의 성과지표 모두 초과 달성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4.3	5.0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통해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가 전반적으로 우수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 [중점 개선 유형] 영향력은 높으나, 수행도는 낮은 과제로서, 사업 수행도 제고를 위해 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 '20년 시행계획 과제 178개 중 13개가 중점 개선 유형에 해당한다.
 - 중점 개선 유형에 포함된 과제들의 수행도 평균은 84.7점, 표준편차는 2.43이며, 영향력의 평균은 4.6 등급, 표준편차는 0.28이다.
- [20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선필요 과제 선정] 시행계획 점검·평가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요청을 받아 중점 개선 유형 중에서 위원회에 보고할 10개 개선 필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 중점 개선 유형 중에서 수행도 점수가 높은 3개 과제를 제외하고 남은 10개 과제를 개선 필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 부문 1개 과제, 교육·문화 부문에서 1개 과제, 정주생활기반에서 4개 과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 4개 과제를 개선 필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비고	
보건 복지	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4.0	4.7	농어촌 주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으며, 사업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농어촌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집중 필요	개선 필요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88.0	5.0	소아청소년과 이용률 변화에 대응한 신규 의료이용 체계 구축 필요	
교육 문화	2-1-1-3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85.3	4.3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성과지표가 진학율만으로 부족하므로 신규 지표 도입 필요	개선 필요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89.3	5.0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 정부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등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효율적 운영이 미흡	
정주 생활 기반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83.0	4.3	삶의 질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사업규모 및 범위 지속 확대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 필요	개선 필요
	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81.3	4.3	삶의 질 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 집행과 성과달성이 미흡함.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	개선 필요
	3-3-2-6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83.7	4.3	농산어촌 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 확대 필요	개선 필요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1) (환경부)	85.0	4.3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 주민 인식 개선 및 예산과 정책 기반 강화 필요	개선 필요
	3-4-4-1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87.7	5.0	농촌 정주공간의 체계적 정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 연구 및 지원 필요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비고	
경제 일자리	4-1-1-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84.0	4.7	어촌지역 소득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집행률, 유지관리체계 등 미흡한 사항 보완 필요	개선 필요
	4-2-1-1	농촌관광 활성화	82.0	4.3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 대처를 위한 현실적 대응책 모색 필요	개선 필요
	4-2-1-3	해양관광활성화	82.3	4.7	사업성과 관리와 모니터링이 잘 구성되어 운영됨 사업 추진이 인프라 투자에 편중되어 농어업인 입장의 사업 검토 필요	개선 필요
	4-3-1-6	청년 어업인 후계영여자금	85.0	4.7	건강한 수산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사업 내용이 자금 융자 측면에 그쳐, 정책 간 연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개선 필요

○ [장기 개선 유형] 장기 개선 유형은 영향력과 수행도가 모두 낮아, 정책 목표 수정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 개선 추진 필요한 과제들이 포함된다.

- '20년 시행계획 과제 29개가 장기 개선 유형에 해당한다.
- 장기 개선 유형에 포함된 과제들의 수행도 평균은 84.7점, 표준편차는 4.11이며, 영향력의 평균은 3.3 등급, 표준편차는 0.59이다.

〈장기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보건 복지	1-4-2-5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86.7	3.7	예산규모, 교육횟수, 교육인원 등 정책 투입량이 부족하고, 관리체계 또한 미흡함. 재해통계 구축 및 안전 장비 개발을 위한 R&D 추진 필요
	1-4-2-6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90.0	3.3	수요 부족으로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선박에 대한 기본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
	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81.0	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취지와 연관성 낮으며, 정책 활용방안의 구체화 필요
	1-4-2-8	민관 협업 수난구조를 통한 선진 바다안전망 구축	83.7	4.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목표와 관련성이 적으며, 정책 성과지표가 심리적 안정감 파악 수준에 그치므로 정책지표 수정 필요
교육 문화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9.7	3.7	농업 분야에 비해 사업 규모가 극히 적으며 수혜자 추적 점검 필요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84.7	3.3	농어촌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학교지원센터' 중심의 사업 추진 등 추진체계 개선 필요
	2-1-2-8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82.7	3.3	원어민 교사의 강의 역량 및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검증 필요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71.7	1.7	농어촌 어린이 대상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관람 콘텐츠 개선 및 방문횟수, 지역 등 사업량 확대 필요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79.3	2.0	지역 중요농업유산, 농경문화, 생활사 등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료 발굴 및 지역 청년을 활용한 지역자원조사활동 등 지원 필요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정주 생활 기반	3-1-1-6	내항 여객선 승선관리 시스템 고도화	86.7	3.3	제도 도입의 효과가 미흡하여,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해운조합과 긴밀한 협업 필요
	3-1-2-4	연안여객선 현대화	88.7	3.7	연안선사에 집중하고 있어 도서민의 만족도 및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3-1-2-6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88.3	3.7	연구개발 사업에 가까우며 일회성 과제로서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적음
	3-3-2-7	산림보호 지원	84.3	4.0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산사태 예방 효과 확인 불가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81.3	4.0	대부분 마을계획이 유사하여 마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다변화된 정책모델 개발 필요
	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1) (해양폐기물 정화)	87.0	3.3	지역 자율 계정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자체의 지속적 추진여부와 성과를 모니터링 할 필요
	3-4-1-5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82.0	2.7	사업내용이 홍보와 일회성 행사 위주로 되어 대대적인 보완 필요
	3-4-1-6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해양자율제대 운영 확대)	90.0	3.3	과제 수행을 위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3-4-3-6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87.7	3.0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지 정책 연구 필요
	3-4-3-9	목재팻릿 사용 확대	87.3	3.7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3-4-3-10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85.0	3.7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사업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
	3-4-3-11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83.0	3.3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대책 사업으로 경창청 본연의 업무로 판단되지만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성은 떨어짐
	3-4-4-5	농어업 유산 지정 및 관리 2	89.0	3.7	삶의 질 향상 정책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고 사업 규모가 적음
경제 일자리	4-1-2-1	푸드플랜 내실화 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81.3	3.7	푸드플랜 실행과정에서 실제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	84.3	4.0	정책사업의 수혜자가 사업 참여 기관에 국한되므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효과 미흡
	4-2-1-5	음식관광 활성화(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85.3	2.3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명 변경 또는 정책 연구를 통해 방향 재설정 필요.
	4-3-3-5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	86.3	3.0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의 관련성이 다소 낮으며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
	4-3-3-6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88.7	3.3	농촌 지역 파급력과 영향력은 한정적
	4-3-3-8	산림 휴양치유공간 조성	78.0	3.3	대국민서비스 부분이 더욱 큰 사업.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적 사업은 아님.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84.0	4.0	단순 일자리 제공에 그쳐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과 통합 필요

○ [지속 유지 유형] 수행도는 양호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책 목표 및 방향 수정이 필요한 유형이다.

- '20년 시행계획 과제 중 과제 7개가 해당 유형에 포함된다.

- 지속 유지 유형에 포함된 과제들의 수행도 평균은 92.4점, 표준편차는 2.10이며, 영향력의 평균은 3.6 등급, 표준편차는 0.23이다.



<지속 유지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보건 복지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93.0	3.7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움
교육 문화	2-3-2-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90.3	3.7	어린이 대상 정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 향후 사업 계획 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하이브리드형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
정주 생활 기반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2) (연안어장 환경개선)	96.7	4.0	어장환경 개선에 기여하므로 필요한 사업이고 목표에 부합하며, 계획에 맞게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4-3-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92.3	3.7	기반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사업의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개선 필요
	3-4-4-2	경관보전 직불제	90.7	3.3	농촌경관의 제고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가 필요
경제 일자리	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 기술 개발	91.7	3.3	연구사업으로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 현장 적용 및 보급지역 반응조사를 시행하는 등 시범사업 단계로서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필요
	4-3-3-2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조성	92.0	3.7	미래 농업기술 확산, 소득 기회 제공 등 중요성이 있으나 영향력, 확산력에 한계가 있고 삶의 질 향상 비전, 목표에 비추어 보면 영향력이 보통 수준

- [정기적 관찰 유형] 수행도와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실행 수준 및 운영 취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20년 시행계획 과제 중 과제의 절반인 89개 과제가 해당 유형에 포함되어 별도로 목록과 평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4대 전략별 평가 및 개선 방안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 〉

■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제시

- 전략 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관련 과제는 보건·복지 부문으로 분류)
- 전략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관련 과제는 교육·문화 부문으로 분류)
- 전략 3: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관련 과제는 정주생활기반 부문으로 분류)
- 전략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관련 과제는 경제·일자리 부문으로 분류)

- 각 부문의 특성을 세부과제들이 속한 유형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 시행계획 4대 전략별 삶의 질 영향력과 수행도 평균값은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유형별 과제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 보건·복지 부문의 39개 사업은 대체로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보건·복지 부문의 성과 확산 유형 과제는 5개로 삶의 질 4대 전략 부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아,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통한 대국민 이슈화가 필요하다.
 - “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등 일부 과제는 일부 과제는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정합성 및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교육·문화 부문 35개 과제 가운데, 성과 확산 유형 과제는 4개로,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자체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반면, 교육·문화 부문의 과제들은 대부분 담당 부처에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삶의 질 향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된 경우가 많다.



- 정주생활기반 부분은 '장기 개선 유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성과 제고 및 정책 목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 대신, 취약지역(마을)의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촌 환경 개선 관련 과제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 과정지표(공정률)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한 과제들이 있어 정책의 실질적 성과(효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경제·일자리 부문은 '중점 개선 유형' 및 '장기 개선 유형'에 해당하는 과제 비중이 크므로, 해당 유형에 따라 정책 목표 수정 및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타 부문보다 우수과제 비중이 적어, 전반적으로 정책 성과 개선 및 삶의 질 취지 제고를 위한 정책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일자리 부문 과제의 추진 여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하지만 해양·수산 분야에 특히 부진 과제가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부문별 점검·평가 주요 평가 수치 및 유형 분포〉

삶의 질 4대 전략 (과제 수)	평가 점수	영향력	성과확산 유형	중점개선 유형	장기개선 유형	지속유지 유형	정기적 관찰 유형	유형별 합계
보건복지 (39개)	91.5	4.4	14개 (35.9%)	2개 (5.1%)	4개 (10.3%)	1개 (2.6%)	18개 (46.2%)	39개 (100%)
교육문화 (35개)	89.9	4.3	8개 (22.9%)	2개 (5.7%)	5개 (14.3%)	1개 (2.9%)	19개 (54.3%)	35개 (100%)
정주생활기반 (66개)	90.4	4.3	12개 (18.2%)	5개 (7.6%)	13개 (19.7%)	3개 (4.5%)	33개 (50.0%)	66개 (100%)
경제일자리 (38개)	89.4	4.3	6개 (15.8%)	4개 (10.5%)	7개 (18.4%)	2개 (5.3%)	19개 (50%)	38개 (100%)
부문별 합계			40개	13개	29개	7개	89개	178개

1.2.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 개요

-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설정·관리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 및 목표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담겨 있다.
 - 정부 부처, 전문가, 농업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설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분석한다.

❖ 주요 추진 내용

□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으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한다.
 - 개편된 핵심 항목은 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개 부문, 1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시·군별 중기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 중기 목표치는 제4차 기본계획 추진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통계청 승인 공표 통계, 각 부처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35개)를 활용하여 점검·분석을 실시한다.
 - 해당 자료는 자료 수집 기간 당시(2020년 9월~12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서비스항목	세부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자료
1. 보건의료·복지	가. 진료	내과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 통계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나. 응급의료		시·군별 119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소요시간	소방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 자료
	다.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보건복지부 보육기관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협조 자료
		유치원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종등 및 고등 교육기관 주소록	공식 통계
라. 노인복지			$\{(\text{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 \text{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text{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공식 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공식 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 조사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공식 통계
2. 교육·문화	가. 초·중등 교육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교육통계서비스: 초·중학교 주소록	공식 통계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나.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수 / 총 읍·면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 자료
				지자체 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행정 조사
	다. 문화	문화예술 회관 및 지방문화원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 통계
	라. 도서관	도서관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식 통계
	마. 체육시설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협조 자료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부문	서비스항목	세부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자료
3. 정주 여건	가. 주택	최저 주거기준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14 슬레이트 주택수 - '20 슬레이트 주택수) / '14 슬레이트 주택수} × 100	국토부: 건축물 대장 표제부 지자체조사: 시·군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실적(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공식 통계 행정 조사
	나.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 지역 주민 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 통계	
	다. 하수도	(군 지역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 군 지역별 인구)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 통계	
	라. 난방		(읍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 / 읍 전체 가구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 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 지역 총 가구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 자료
	마. 대중교통		(도보 15분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리 수) × 100	산림빅데이터 버스노선 정보	협조 자료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 실적	협조 자료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 조사
	바. 생활폐기물	영농 폐기물 처리장	(영농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읍 면수 / 총 읍·면수) × 100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동집하장 정보 목록 조회	공식 통계
		생활 폐기물 처리장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수 / 총 행정리수) × 100	지자체조사: 행정리별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	행정 조사
	사. 방법설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행정 조사
아. 경찰순찰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장소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 여부	경찰청: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탄력순찰 실시 현황	협조 자료	
자. 소방출동		(시·군별 목표시간내 도착 건수 / 총 건수) × 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목표시간 및 도착소요시간	협조 자료	
4. 경제 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 조사



□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 보건의료·복지 부문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진료 항목의 이행실태는 23.3분이었으며, 강원도(34.3분)를 제외하면 목표(30~60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였다.
 - 응급의료 항목은 20.5분, 영유아 보육·교육은 5.8분, 노인복지는 99.3%로 각각 목표(응급의료: 30분, 영유아 보육·교육: 20분, 노인복지: 6.5%)를 달성하였다.
- 교육·문화 부문은 도서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초·중등교육 항목은 7.5분으로 목표치(10분)를 달성하였으나, 통학수단 제공 여부는 교육청 자료 미제공으로 점검이 불가능했다.
 - 평생교육 88.2%, 문화는 24.7분, 체육시설 항목은 18.8분으로 목표(평생교육: 70%, 문화: 40분, 체육시설: 30분)를 달성하였다.
 - 도서관 항목의 이행실태는 10.3분으로 목표(10분)를 달성하지 못했다.
- 정주여건 부문은 난방, 방법설비,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난방 항목은 68.1%로 목표치(68%)를 달성하였고, 방법설비(64.9%), 소방출동(72.1%) 항목도 목표(방법설비: 60%, 소방출동: 70%)를 달성하였다.
 - 주택 항목은 석면소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는 개량 비율이 7.8%로 목표치(23%)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대한 조사는 2015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방식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되어 통계자료를 구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했다.
 - 상수도(77.0%), 하수도(71.8%) 항목은 목표(상수도:85%, 하수도:76%)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경찰순찰 항목도 62.9%로 목표치(100%)에 미달하였다.
 - 대중교통 항목의 이행실태는 87.1%로 모든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목표치(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 생활폐기물 항목의 이행실태는 영농폐기물처리장 설치 읍면 비율이 66.4%, 생활폐기물처리장 설치 행정리 비율이 16.7%로, 모든 행정리 내 영농·생활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야 한다는 목표(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 경제활동 부문에서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이행실태는 65.5%로 목표(86%)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이행 실태
1. 보건의료·복지	가. 진료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23.3분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0분	20.5분
	다. 영유아 보육·교육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5.8분
	라. 노인복지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80%	99.3%
2. 교육·문화	가. 초·중등교육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7.5분
	나.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0%	88.2%
	다. 문화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24.7분
	라. 도서관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10.3분
	마. 체육시설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18.8분
3. 정주 여건	가. 주택	농어촌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지붕은 철거 혹은 개량한다.	23%	7.8%
	나.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5%	77.0%
	다.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	71.8%
	라.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68%	68.1%
	마.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87.1%
	바. 생활폐기물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66.4% 16.7%
	사.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64.9%
	아. 경찰순찰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 시간·장소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100%	62.9%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70%	72.1%
4.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6%	65.5%



- 2020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총 19개 항목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 수는 11개, 달성하지 못한 항목은 8개로 나타났다.
- 2020년도에 제4차 삶의질 기본계획에 맞추어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과년도 항목과 연속성이 부족하여 연도별 비교는 하지 않았다.

□ 지역별 이행실태 점검·분석

- 2020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별 이행실태 점검·분석은 시·도별 농어촌 시·군의 평균값을 전국 농어촌 시·군의 평균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노인복지 항목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자료를 근거로 점검·평가하였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 하수도 항목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군지역이 없어 제외하였다.
- 경기도는 노인복지, 생활폐기물,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14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보다 달성률이 높았다.
- 주택,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다른 도 지역에 비해 이행실태는 양호한 편이다.
- 총 14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강원도는 총 14개 항목에서 전국 농어촌 평균에 비해 이행실태가 미흡하다.
- 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에서 전국 농어촌 평균에 비해 이행실태가 저조하였다.
- 진료, 난방 항목에서 전국 농어촌 시도 중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 총 9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충청북도는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총 9개 항목에서 달성률이 높았다.
- 진료, 응급의료, 문화, 주택, 하수도,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이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총 11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 충청남도는 10개 항목의 달성률이 전체 농어촌 평균보다 높다.
 - 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대중교통, 방법설비, 소방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이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응급의료 항목에서 전국 농어촌 시도 중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 총 12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전라북도는 총 14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이행실태가 높았다.
 -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방법설비, 소방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이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총 12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전라남도는 총 6개 항목이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응급의료, 노인복지, 초·중등교육, 대중교통,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농어촌 시도 중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 총 9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경상북도는 5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이행실태가 미흡하다.
 - 응급의료, 평생교육, 주택,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항목에서 전국 농어촌 평균보다 높았다.
 - 총 10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경상남도는 총 7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교육, 도서관, 체육시설,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에서 전국 농어촌 평균에 비해 높았다.
 - 총 11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제주도는 총 9개 항목이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이행실태가 양호하다.
 -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도서관, 체육시설, 대중교



- 통, 생활폐기물, 소방출동 항목이 전체 농어촌 평균에 비해 달성률이 높다.
- 상수도 항목은 전국 농어촌 시도 중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 총 11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평균적으로 농어촌 평균보다 달성률이 높다.
- 부산광역시(기장군)는 노인복지,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4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보다 달성률이 높다.
 - 대구광역시(달성군)는 노인복지, 평생교육,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5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보다 달성률이 높다.
 - 울산광역시(울주군)는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 교육, 노인복지, 초·중등교육, 문화,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10개)을 제외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보다 달성률이 높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노인복지, 하수도 항목에 대한 자료를 구득하지 못하였으며,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보다 달성률이 낮다.
 -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의 평균)의 경우 진료, 영유아 보육 교육, 노인복지,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경찰순찰, 소방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12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평균보다 달성률이 낮다.
 -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총 15개, 대구광역시(달성군) 14개,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10개, 울산광역시(울주군) 12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구분/ 중기 목표	1. 보건의료·복지				2. 교육·문화				
	진료 0.5~1시간	응급의료 30분	영유아 보육·교육 20분	노인복지 6.5%	초·중등교육 10분	평생교육 70%	문화 40분	도서관 10분	체육시설 30분
부산(기장)	7.2	17.5	3.2	11.4	5.6	100.0	18.3	3.6	10.8
대구(달성)	11.3	19.1	4.8	10.7	5.9	44.4	15.2	7.0	12.5
인천(강화옹진)	25.6	12.9	6.2	11.3	7.1	100.0	27.8	14.8	25.9
울산(울주)	14.1	21.8	6.0	11.9	8.1	100.0	25.1	7.4	14.9
세종특별자치시	14.0	10.1	4.5	-	6.1	100.0	21.4	7.3	11.0
경기도	15.3	16.9	4.0	10.2	6.1	92.1	20.3	6.6	13.9
강원도	34.3	18.6	8.3	13.2	8.9	90.8	32.1	14.2	20.3
충청북도	22.3	16.4	6.2	11.7	8.2	87.3	23.5	11.0	19.4
충청남도	20.4	23.6	5.0	12.7	6.9	83.2	21.8	8.7	21.3
전라북도	22.6	18.7	5.1	14.9	6.4	84.3	22.1	9.9	16.2
전라남도	25.6	17.3	6.1	13.9	7.2	79.9	24.8	11.9	21.2
경상북도	26.3	18.7	6.8	11.9	8.9	92.4	26.8	13.9	22.0
경상남도	23.4	15.4	5.6	11.8	7.6	94.9	25.1	9.7	17.5
제주특별자치도	26.6	17.7	3.8	10.2	5.6	100.0	36.5	4.2	9.5
농어촌 시·군	23.3	20.5	5.8	12.1	7.5	88.2	24.7	10.3	18.8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계속)〉

구분	3. 정주여건										4. 경제활동	
	주택 (슬레이트) 23%	상수도 85%	하수도 76%	난방 68%	대중교통 100%	생활폐기물		방법실비 60%	경찰순찰 100%	소방출동 70%	4. 경제활동	
						영농폐기 물처리장 (읍면)	생활폐기물 처리장 (행정리)					
부산(기장)	13.9	100.0	90.3	90.4	95.2	0.0	2.2	95.1	48.8	71.9	100.0	86%
대구(달성)	15.3	100.0	89.6	91.0	90.5	66.7	3.8	71.7	48.3	71.0	100.0	
인천(강화옹진)	9.0	52.5	34.1	72.7	75.5	90.0	19.5	73.3	35.7	55.5	50.0	
울산(울진)	10.2	78.9	96.2	97.0	82.9	100.0	3.2	25.8	50.9	66.8	100.0	
세종특별자치시	19.8	72.0	-	116.4	85.0	80.0	0.0	93.6	51.4	65.5	0.0	
경기도	10.0	85.9	80.7	87.6	90.6	65.7	24.8	64.3	55.2	54.4	93.3	
강원도	7.5	71.9	77.5	26.3	77.1	81.5	8.2	52.2	51.5	70.8	66.7	
충청북도	8.2	71.6	73.3	66.4	84.0	95.1	19.2	62.9	67.7	74.7	90.9	
충청남도	7.2	72.4	62.3	65.5	91.8	49.7	13.9	66.6	61.3	87.7	86.7	
전라북도	7.4	88.1	73.5	50.0	91.9	47.2	21.2	81.9	61.6	82.2	76.9	
전라남도	6.6	75.6	67.4	49.3	87.4	67.7	2.3	59.1	84.9	73.7	23.8	
경상북도	7.8	75.3	60.0	64.7	87.1	78.2	17.7	62.8	61.1	71.1	60.9	
경상남도	7.4	76.6	70.1	67.5	84.1	51.5	29.2	62.5	77.9	82.3	55.6	
제주특별자치도	7.7	36.8	-	0.0	94.3	83.3	100.0	60.5	56.4	83.3	50.0	
농어촌 시군	7.8	77.0	71.8	68.1	87.1	66.4	16.7	64.9	62.9	72.1	65.5	

1.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 개요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에 따라 정부 부처의 계획·정책·사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이다.
 -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또는 사업이 교통접근성 및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전달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시 대비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정책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 등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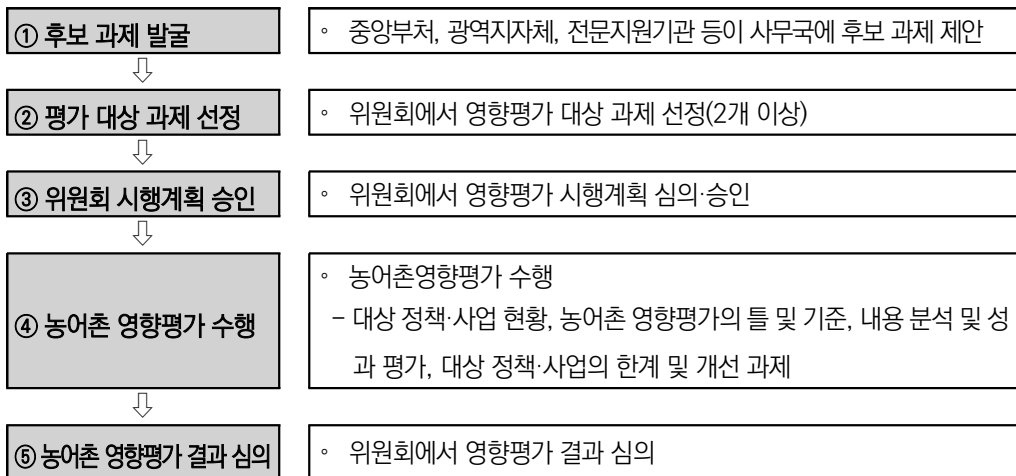
❖ 주요 추진 내용

-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명확한 절차에 의거한 제도 추진을 위해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 ‘제2차 기본계획’ 시기였던 2011년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후, 중앙부처 및 시도 단위의 자체 평가와 전문지원기관 주관의 전문영향평가를 실시(‘11~’14)하였으나, 연구과제 형식의 전문평가로 추진되면서 평가의 시의성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



- ‘제3차 기본계획’ 시기에 영향평가 사전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017년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용지침(안)’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제정되지 못하였다.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추진 주체와 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명시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을 작성하여, 2020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였다.

〈농어촌 영향평가 절차(운영지침 제5조)〉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0.10.23.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제5조(절차)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후속조치 이행)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

제7조(재검토기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사전협의제도 도입 및 제도화 지원

❖ 개요

- 사전협의제도는 이행 부진,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매년 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반기 위원회에서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위원회 심의 후 정부예산 확정 전 기재부에 결과를 통보하면, 관계 부처는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대상) 매년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전협의 대상 과제를 확정한다.

〈 농어촌 사전협의 대상 3대 과제(안) 〉

- ①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 부진과제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에서 달성도가 미흡한 항목과 관련된 정책·사업
- ③ 농어촌영향평가의 결과로 사전협의의 필요성이 제시된 중앙 부처의 계획·정책·사업

❖ 도입배경

- 부처별 삶의 질 정책 성과가 부진할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정책 조율 및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 삶의질법 개정*(19.8)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결과의 개선조치 및 서비스기준 달성 심의 의무화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 * [제9조]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제반조치 시행 의무화, [제10조] 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 서비스기준 달성도 등 심의 기능 부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삶의 질 위원회의 각 부처 삶의 질 관련 정책·사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

처 간 사전협의를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영향평가제도 등 기존 제도들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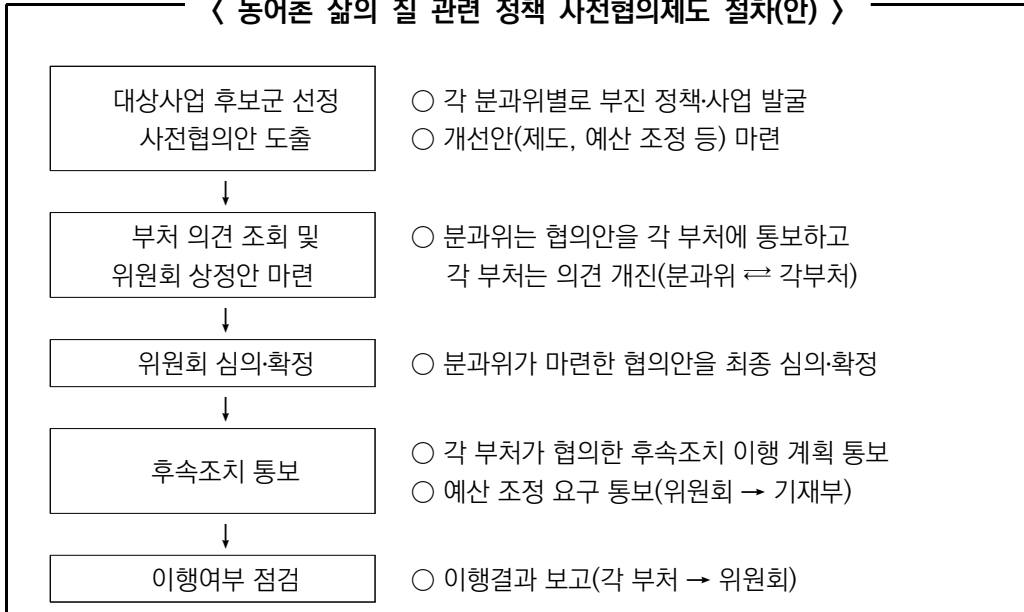
❖ 사전협의제도 절차 및 추진체계 개편(안)⁴⁾

- (방식·절차상) 분과위에서 협의안을 도출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상반기 삶의 질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 (사전협의안 도출) 각 분과위는 대상의 문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사항 관련 예산 확충 방안 등을 마련·권고한다.
- (부처 의견 청취) 분과위의 협의안에 대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의 의견*을 청취·조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협의안을 확정한다.
 - * 부처는 의견 제출 시,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위원회 심의·확정) 위원회에서는 사전협의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차년도 예산 정부안 확정 전 기재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예시) 재난안전예산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 사전협의안(행안부)을 심의·조정하고,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결과 통보
- (후속 조치 이행) 관계부처는 필요한 제도 개선(법 개정 등) 등을 이행하고, 검토 의견을 기재부에 제공하여 예산 수립시 반영되도록 유도한다.
- (이행 점검) 후속조치 이행에 미온적인 부처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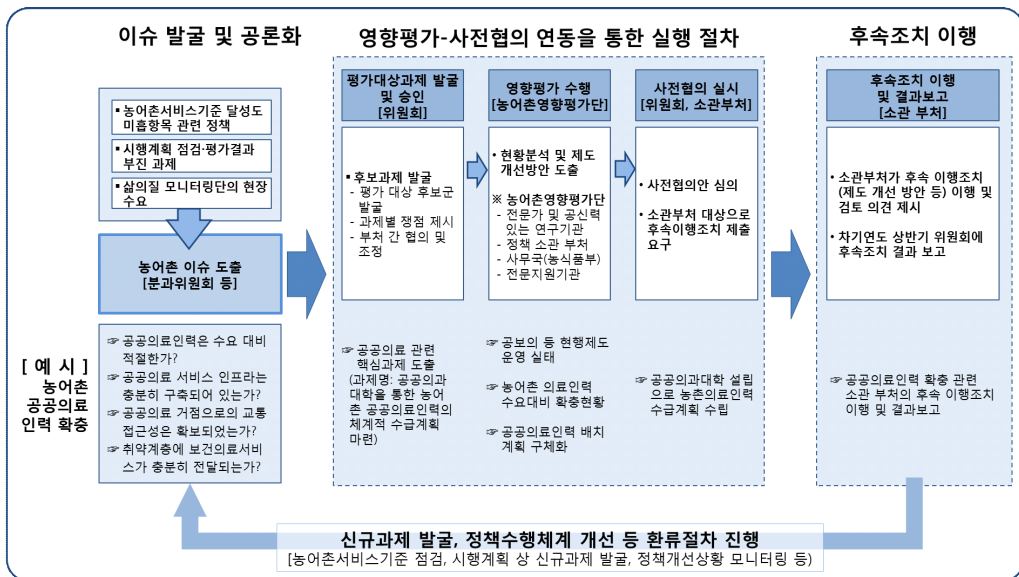
4) 위에 제시된 안은 전문지원기관이 2020년도에 제시한 안으로, 이후 '농어업인 삶의 질법' 개정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책 사전협의제도 절차(안) 〉



〈 농어촌영향평가 및 사전협의 연동을 통한 실행절차 개선(안) 〉



❖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 법률 개정안

-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예산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 삶의 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예산의 사전협의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의견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삶의 질 시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삶의 질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투자 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삶의 질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중점 추진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중복 석 검토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제고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삶의 질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통한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에 배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9조의2(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의견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삶의 질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삶의 질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 결과 4. 그 밖에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제고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p>
<p>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이하 생략</p>	<p>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삶의 질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4. 이하 생략</p>

□ 시행령 개정안

-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위원회 관련 사항 중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을 검토하였다.
 - 특별법 제9조의2에서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은 없으나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 제10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다.
 - 특별법 제10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사전협의에 관해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위원회 안건 부의 요구와 관련하여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예산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시행계획 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실무위원회가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적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간 유사성·중복성에 대한 검토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이하 생략</p>	<p>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협약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9조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의4. 법 제9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이하 생략</p>
--	--



2. 조사·연구 입무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2. 삶의 질 심층연구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개요

-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 2020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 위치를 파악하였다.
 - 둘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 통계적 특성, 농어촌 지역 유형에 따른 각 정책 부문 여건 만족도 차이 및 이주 의향을 살펴보았다.
 - 특히 2020년도 조사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정책 추진 전략에 따라 부문별 조사 항목을 개편하였다.
 -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에 신규 문항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추가하였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 항목은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요 항목인 ‘공동체’와 ‘시민참여’ 항목의 지표를 참고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 2020년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3,012명이며, 그 중 동 지역 주민 응답자는 793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2,219명이었다.

○ 조사 항목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정책 전략별 여건 만족도, 정주 여건 분야별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 등이다.
-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까지 적용한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부분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에 따라 세부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 만족도를 묻는 각 항목은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일부 항목에서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 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 주관적 웰빙 지수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전략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별 6~11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4개 추진 전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 분야별 정책 중요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정책 중요도 1순위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중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높지만,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점수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소폭 하락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각각 0.7점, 0.5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 항목에 대한 도시 지역의 평가는 전년도와 비교해 변화가 없으나, 농어촌 지역에서 점수가 하락하였다. 전년도 두 항목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다시 농어촌 주민의 평가가 도시 주민의 평가를 밑돌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11점 척도)

구 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도시지역 (동)	5.9	5.7	5.5	6.1	6.0	5.8	6.5	6.2	6.2	6.5	6.3	6.3
농어촌지역 (읍·면)	6.1	6.4	6.2	6.2	6.4	6.3	6.2	6.3	5.7	6.3	6.4	6.0
도농차이 (농촌-도시)	0.2	0.7	0.7	0.1	0.4	0.5	-0.3	0.1	-0.5	-0.2	0.1	-0.3

- 주관적 웰빙 조사⁵⁾ 결과, 전년도에 비해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는 모두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 주민에 비해 높다.
 -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정도’ 문항에 대한 도시 주민의 응답이 5.7점,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 문항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응답이 4.9점(역코딩 시 5.1점⁶⁾)의 전년도 점수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주관적 웰빙을

5) 2017년도 조사부터 도입된 주관적 웰빙 조사는 농촌 주민의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의 삶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 조사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의 ‘주관적 웰빙’과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지수를 산출한다.



나타내는 점수들이 하락하였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변화〉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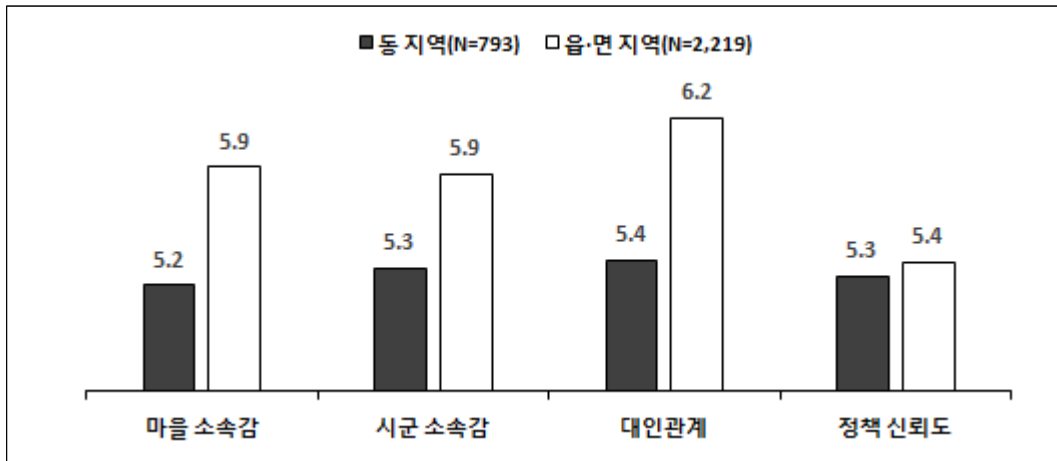
구 분	1.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4.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 하셨습니까?		5.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도시 지역 (동 지역)	5.6	5.5	5.8	5.6	5.6	5.9	4.8	5.1	5.7	5.7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6.3	6.1	6.4	6.1	4.9	4.9	4.1	4.3	6.1	5.9
도·농차이 (농촌-도시)	0.7	0.6	0.6	0.5	-0.7	-1.0	-0.7	-0.8	0.4	0.2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조사 결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 대인관계, 정책 신뢰도를 묻는 네 개의 문항에서 모두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높다.
 - 올해 조사부터 도입되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문항은 응답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등을 묻는다.
 - 대인관계는 응답자가 이웃 또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문항으로, 두 지역 간 점수 차이가 0.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시·군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점수도 도시 주민은 각각 5.2점, 5.3점인데 반해 농어촌 주민은 5.9점으로 더 높다. 앞서 대인관계 문항과 연결지어본다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공동체 관계를 훨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신뢰도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농어촌 주민의 정책 신뢰도가 도시 주민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부정적 의미의 지표에 대한 점수를 11점 척도 기준에서 역으로 환산

〈도시·농어촌 주민의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비교〉

(11점 척도)



□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추진 전략별 만족도 조사 결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의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보다 전반적인 여건을 열악하게 인식하고 있다.
 -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1.6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보건·복지 분야는 지난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도 도·농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분야였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전략 부문은 정주기반(5.9점)이며, 이어서 보건·복지(5.2), 교육·문화(4.8), 경제·일자리(4.6) 순이다.
 - 4대 전략 부문 중 교육·문화와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 5.1점보다 낮다.
 -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0.9점), 절대적인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4.6)되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11점 척도)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6.8	5.2	-1.6
교육·문화	6.1	4.8	-1.3
정주기반	6.9	5.9	-1.0
경제·일자리	5.5	4.6	-0.9
전체 평균	6.3	5.1	-1.2

○ 4대 전략 부문의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각 부문별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항목이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 전체 세부 항목 중 ‘분만의료 서비스(4.4점)’, ‘문화·여가 프로그램(4.4점)’, ‘대중교통(5.2점)’, ‘소득 기회(4.5점)’ 등 각 전략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전략 부문 내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 ‘분만의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5.7점)’, ‘의료 서비스 범위(5.0점)’, ‘의료 서비스 수준(5.1점)’ 등의 보건의료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 문화·여가 인프라 및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고,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두드러진다.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비교〉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5.7	-1.7
	의료 서비스 범위	7.1	5.0	-2.1
	의료 서비스 수준	6.9	5.1	-1.8
	분만의료 서비스	6.7	4.4	-2.3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2	-1.8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5	5.5	-1.0
	아동 양육·보호 지원	6.3	5.4	-0.9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5.6	-0.6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	5.9	-
	(평균)	6.8	5.2	-1.6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6.6	5.2	-1.4
	방과 후 교육 기회	6.5	5.1	-1.4
	평생교육 기회	6.1	4.7	-1.4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1	4.7	-1.4
	문화·여가 시설	6.2	4.6	-1.6
	문화·여가 프로그램	6.2	4.4	-1.8
	문화 공동체 활동	5.7	4.7	-1.0
	향토문화 향유	5.7	4.9	-0.8
	(평균)	6.1	4.8	-1.3
정주기반	대중교통	7.1	5.2	-1.9
	통신시설	7.6	6.1	-1.5
	생활 인프라	7.3	5.9	-1.4
	생활 서비스	7.3	5.6	-1.7
	주택 상태	6.7	5.9	-0.8
	교통안전	6.5	6.0	-0.5
	자연재해 안전	7.0	6.2	-0.8
	범죄 안전	6.7	6.4	-0.3
	적은 환경오염	6.6	6.1	-0.5
	정돈된 환경·경관	6.6	6.2	-0.4
	에너지 비용 절감	6.1	5.4	-0.7
	(평균)	6.9	5.9	-1.0
	경제·일자리	소득 기회	5.6	4.5
경제여건 향상		5.3	4.6	-0.7
농외소득(농촌만)		-	5.0	-
농어촌관광(도시만)		5.2	-	-
일자리 지원		5.5	4.7	-0.8
여성·다문화 일자리(농촌만)		-	4.8	-
(평균)		5.5	4.6	-0.9

주: 각 부문의 평균 점수와 세부항목의 도·농간 차이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 농어촌 주민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여건 만족도 요인

- 농어촌 지역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 응답자는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 응답자는 문화·여가 인프라 및 교육 여건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 연령대별 주요 만족도 점수 하위 다섯 개 항목을 살펴본 결과, 20~30대, 40~50대



- 두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분만 의료 서비스’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꼽았다.
- 60대 이상 응답자의 만족도 점수 하위 다섯 개 항목 중 네 개 항목이 교육·문화 여건에 해당했다.
 - 그밖에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은 ‘농어작업 안전’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40대~50대는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일자리 지원’ 등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부족함을 느꼈다. 60대 이상 고령 응답자에게서도 ‘소득기회’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만족도 부진 순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순위	분만 의료 서비스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2순위	농어작업 안전	소득기회	문화여가 시설
3순위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경제여건 향상	소득기회
4순위	문화 공동체 활동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순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회

- 농림어업 종사자는 교육·문화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았던 반면 그 외 직업군에 종사하는 주민은 산부인과 서비스와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에게 만족도가 낮은 다섯 개 항목 중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평생교육 기회’ 등 교육·문화 부문에서 네 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세 번째 순위로 낮게 평가한 여건은 ‘소득기회’였다.
 - ‘소득기회’에 대한 평가는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 외 직업군 응답자에게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그밖에 ‘경제여건 향상’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농림어업 종사여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만족도 부진 순위	농림어업에 종사	그 외 직업군에 종사
1순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분만 의료 서비스
2순위	문화여가 시설	소득기회
3순위	소득기회	문화 공동체 활동
4순위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5순위	평생교육 기회	경제여건 향상

- 귀농·귀촌한 주민은 경제 활동 여건이 주로 부족하다고 평가한 한편, 기존 주민들에게서는 경제 활동 및 문화·여가 인프라 여건이 함께 저조한 분야로 꼽혔다.
 - 귀농·귀촌한 응답자가 가장 열악하다고 느낀 다섯 개의 여건 중 세 개 항목은 ‘소득기회’, ‘일자리 지원’, ‘경제여건 향상’ 등 경제·일자리 부문에 속했다.
 - 한편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은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이다.
 - 그 외 직업군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설’,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등 문화·여가 인프라 및 경제 활동 여건이 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귀농·귀촌 여부별 주요 만족도 하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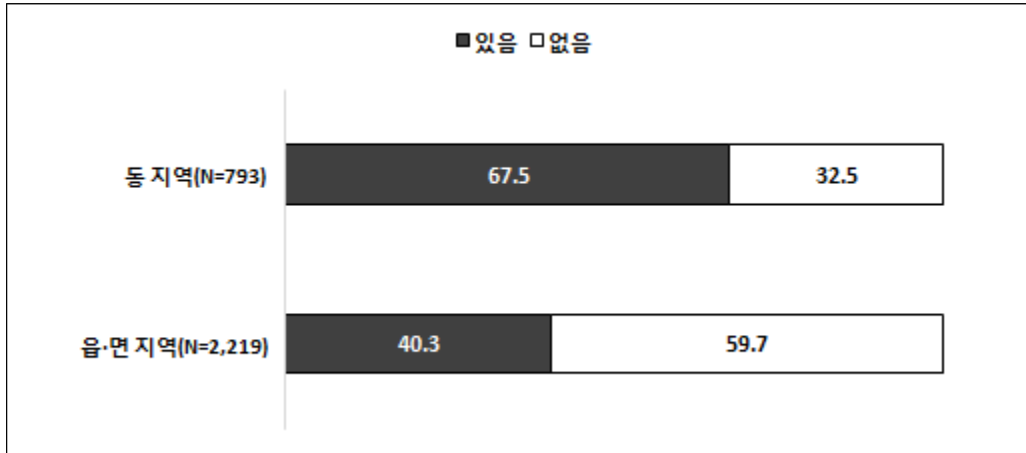
만족도 부진 순위	귀농·귀촌함	아님
1순위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2순위	소득기회	소득기회
3순위	일자리 지원	분만 의료 서비스
4순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시설
5순위	경제여건 향상	경제여건 향상

▣ 도시·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

- 도시 주민의 이주 의향이 농어촌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 농어촌 주민 중에서는 40.3%가 타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을 나타내는 데 반해 도시 주민 중에서는 67.5%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도시·농어촌 주민 이주 의향 조사 결과〉



-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이 각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주민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에 열악한 환경, 충분치 않은 소득 기회, 열악한 교통 여건 및 문화·여가 인프라 등을 꼽았다.
- 이주 희망 사유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18.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득 기회가 마땅치 않다(11.3%)’,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10.6%)’, ‘교통이 불편하다(10.3%)’ 순으로 나타났는데, 1, 2위 간 격차가 다소 뚜렷했다.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 비율(%)	
	도시 주민(n=535)	농어촌 주민(n=895)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19.8	8.1
(개인 희망이 아닌)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4.2	9.6
교통이 불편하다	11.4	10.3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소득 기회가 마땅치 않다	9.9	11.3
자녀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7.3	10.6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6.5	9.7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4.9	2.1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3.2	1.6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2.4	18.0
난방비가 많이 든다	2.1	2.2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1.7	3.4
마을에 (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없다	1.5	2.0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1.1	1.0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1.1	0.4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0.9	3.4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0.7	2.0
태풍·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0.6	0.9
기타	10.7	3.2
합계	100.0	100.0

▣ 농어촌 지역 유형에 따른 주요 여건 만족도 요인

○ 읍·면 지역 간 여건 만족도 점수 격차가 가장 큰 다섯 개의 항목 중 세 개는 정주기반 부문에 해당해, 기본적인 정주 생활 인프라의 읍·면 격차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 ‘생활 서비스’,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등 정주기반 부문의 세 항목이 읍·면 지역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1, 3, 4순위에 해당한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 차이도 1.0점으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인프라 중 하나인 ‘문화·여가 시설’ 항목 역시 읍·면 지



역에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만족도 점수가 저조하게 측정된 가운데, 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읍·면 만족도 격차 상위 5개 세부 항목〉

만족도 격차 순위	세부 항목명	만족도 점수		
		읍	면	읍·면 격차(읍-면)
1순위	생활 서비스	6.3	5.1	1.2
2순위	의료 서비스 접근성	6.3	5.3	1.0
3순위	통신시설	6.6	5.7	0.9
4순위	생활 인프라	6.4	5.5	0.9
5순위	문화여가 시설	5.0	4.2	0.8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지역 유형에 따라 주민들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야가 상이한 특징이 드러난다.

- 근교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문화 공동체 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과 ‘여성·다문화 일자리’ 등 문화 및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해 미흡하게 평가했다.
- 원격 어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낮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 원격 평야 지역에서는 ‘소득기회’, ‘일자리 지원’, ‘경제여건 향상’ 등 경제 활동 여건에 대해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 원격 어촌 지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 외에도 ‘농어작업 안전’,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준’ 등 보건의료 및 안전 분야 여건에서 미흡함을 느끼고 있다.

〈지역 유형별 만족도 하위 5개 세부 항목〉

부진 순위	도시화되고 있는 근교 지역	읍·면 소재지	소재지와 떨어진 평야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산간 지역	소재지와 떨어진 어촌 지역
1	문화 공동체 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분만 의료 서비스	분만 의료 서비스
2	분만 의료 서비스	소득기회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농어작업 안전
3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시설	소득기회	문화여가 시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4	여성·다문화 일자리	분만 의료 서비스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서비스 수준
5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경제여건 향상	경제여건 향상	여성·다문화 일자리

□ 소결 및 시사점

- 2020년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거주 지역의 발전 전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보건·복지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정책 분야들에 대한 정주 여건은 실제 이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모두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다.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여건, 불충분한 소득 기회와 자녀 교육 여건, 불편한 교통 등은 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하는 잠재적인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농어촌 주민의 연령대, 농어업 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각 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가 상이하다.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이 읍 지역보다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유형에 따른 각 여건별 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난다.
- 정주 여건의 도·농 만족도 격차가 극심한 분야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으로의 전환에 따라 각 정책 부문 및 세부 항목에 대한 문항을 개편하면서 과거 조사 결과와의 직접적인 만족도 점수 비교가 어려우나, 일부 비교가 가능한 세부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모든 여건에서 도시 지역보다 불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어촌 주민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고 도·농 격차가 다시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나타내는 물리적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보건·복지와 교육·문화 부문의 핵심항목 이행실태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부진하며, 실제로 본 조사에서 주민들이 해당 부문 항목에 평가하는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처럼 격차가 특히 심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또한 2020년도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정서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해보다 종합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계층별, 지역별 상이한 수요에 부합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잠재적인 지역 이탈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젊은 연령층, 농어업 비종사자, 또는 근교 농촌 지역과 원격 어촌 지역의 주민의 이주 의향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각 인구 특성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 인구를 벗어난 다각적인 개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인구 이탈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젊은 연령층은 특히 분만 의료 및 응급 의료 서비스와 농어작업 안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부인과 및 응급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농어작업에 대한 미숙함이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원격 산간 지역에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고 원격 어촌 지역에는 어업과 관련한 보건의료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읍면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각 농어촌 지역 특성에 따라 미흡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2. 삶의 질 심층연구

❖ 개요

- 삶의 질 심층연구는 국책 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전문 분야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020년도부터 추진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 ① 보건·복지, ② 교육·문화, ③ 정주기반, ④ 경제·일자리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제별 이슈에 대하여 통계 및 현장 자료를 활용해 농어촌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실증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2020년 심층연구는 제4차 기본계획에 설정된 방향에 따라 핵심 과제들을 발굴, 이를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거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러 전문가 및 국책연구원과 협업하여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였다.

〈2020년 심층연구 추진 내역〉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주제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최경환	농촌지역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남훈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확산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김도기	농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2.2.1. 농촌지역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활용 방안

- (배경) 코로나19에 직면한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원격의료이 실시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을 표방하였으며, 부처별로 원격의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대형 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서는 외국인 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재외국민(해외동포, 유학생)에 2년간 한시적으로 원격의료이 허용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혜택을 농촌 지역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여 농촌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의료의 정위와 유형 등 관점에 따른 쟁점을 정리하고, 국내외 원격의료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 뒤, 농촌 지역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국내에서는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서 의료인 간 원격 의료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원격 진단과 처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한편 미국이나 일본,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는 오지 등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대병원과 연천 보건소 간 실시한 원격영상진단이 원격의료의 첫 시도라 할 수 있으며,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다.
 -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 산재화가 두드러지는 농촌 지역 여건 상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술이나 시설 확충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 (정책 제안) 농촌 지역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활용 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가 되는 기본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추진전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농업인이 안전한 농업 활동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농업인 직업성 질병을 규명·확립하는 차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추진 전략으로서 ① 농정 차원에서 정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② 현행 관련 정책(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③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④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 산재화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⑤ 대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완 수단으로서 활용하며, ⑥ 범부처 관련 정책과 연계하고, ⑦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으로 전체 농업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촌 지역 비대면 보건·의료 단계별 추진 방안>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21~’22)	‘비대면 농업인 직업성 건강·안전 관리 사업(가칭)’ 준비TF 구성·운영 유형별 실시 설계 및 비용 추계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 농업인 직업성 질환 규명 장기계획 수립 시범사업 설계 사업지침 작성 소요 비용 산출 및 예산 확보 대상지역 선정: 공모 방식(‘센터 - 지자체 - 마을’ 패키지)
2단계 (’23~’27)	시범사업지역 단계적 확대 사업 대상자 확대 시범사업 결과 모니터링·평가 사업의 전국 확대 대비 제도(설계) 보완
3단계 (’28~)	사업 대상을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 사업 내용의 확충 및 추진체계 수정·보완 사업효과 평가(정량적, 정성적) 농업인 직업성 질환 규명 작업 정밀화



2.2.2.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확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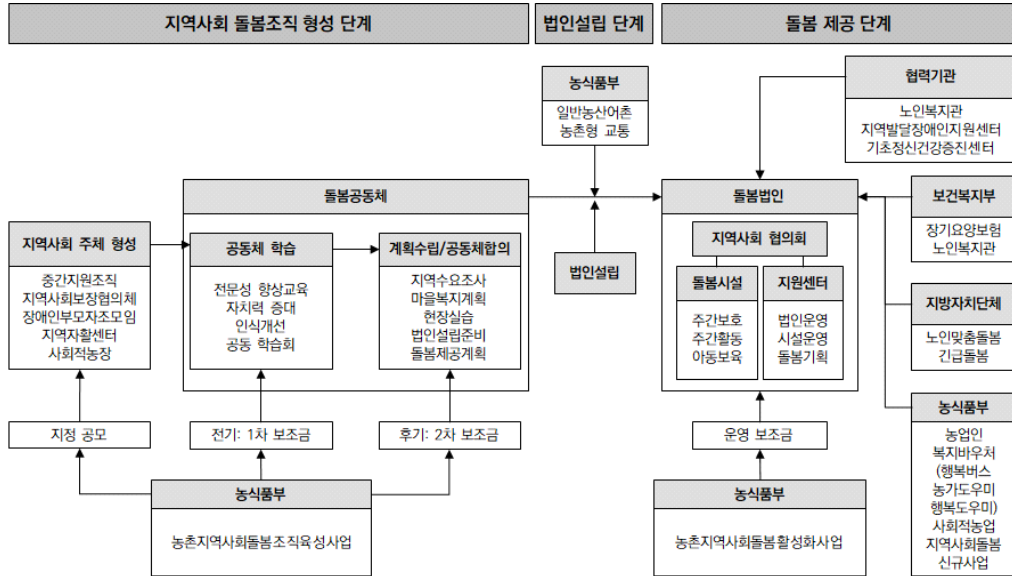
- (배경)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의료와 돌봄 시설이 부족하고 대상자가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워 시·군·구 단위 복지 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 돌봄 제공으로는 농촌 지역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
 - 열악한 돌봄 제공 체계, 지리적 불리함,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 환경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약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지역 맥락을 고려하여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적 돌봄 체계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 (주요 내용) 농촌 현장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를 면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였다. 농촌 지역사회 돌봄 수요 및 제공 의향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촌에는 노인 돌봄 잠재 수요자가 많다. 면 지역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전체 141만 명 중 27.3%인 약 38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 공적 돌봄 대상자는 22만 명으로 약 16만 5,000만 명이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 발달장애인은 영유아·학령기에서 청장년, 중·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면 지역 장애인 복지관은 전체 복지관의 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체 보호시설의 6%에 불과하다. 시설과 서비스 부족 때문에 농촌 성인 발달장애인 10명 중 2명, 30대 이상 농촌 거주 발달장애인은 10명 중 1명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농촌의 지역사회가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주체이다. 지역사회 주민과 공동체가 직접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하며 돌봄 관련 시설을 운영한다. 면 중심지에 주간보호센터와 돌봄 지원센터, 마을에는 생활돌봄

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을 설치한다. 면과 마을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운영하여 중심지 돌봄 시설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 (정책 제안)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3단계 절차 모형으로 제안한다. 1단계는 공동체 형성 단계, 2단계는 법인 설립 단계, 3단계는 돌봄 제공 단계다. 1단계는 다시 지역사회 주체 형성 단계와 공동체 학습 단계, 계획 수립 및 공동체 합의 단계로 구분한다. 절차 모형 단계마다 활동 주체의 기능과 역할, 설치 방안,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1단계는 공동체 형성 단계이다. 1단계는 다시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주체 형성이다.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주도한다. 다음 단계는 공동체 학습 단계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에서는 전문가가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체 학습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지막은 계획 수립·공동체 합의 단계다. 계획 수립은 공동체 학습 후 실제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 2단계는 법인 설립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원칙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수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의사결정보다 돌봄 수요가 있는 곳은 수요가 적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 3단계는 돌봄 제공 단계다. 돌봄조직은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과 합의한 바에 따라 면 지역에 돌봄 시설을 설치한다. 주민이 합의한 계획에 따라 노인 대상 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설,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재활시설, 영유아·청소년 대상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치하고 돌봄을 제공한다. 면 중심지에는 지원센터도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운영·관리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절차 모형〉



○ 지역사회 주체와 사회적 배제 계층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면 단위 농촌에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확산시키고자 2단계로 구성된 돌봄조직 지원사업을 제안한다.

- 사업 1단계는 농촌 지역의 돌봄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돌봄조직이 주민과 함께 돌봄을 기획·제공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역량을 강화하려면 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 2단계 사업은 농촌에서 돌봄조직이 실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사무국 내 사무국장이나 사무장 등의 활동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와 함께 돌봄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나 보조 인력 활용 비용, 송영 서비스 비용, 네트워크 구축 비용, 안전시설이나 휴게 시설의 개보수 비용 등을 보조하여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3.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편 방안 연구

- (배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생활서비스가 배후마을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심지의 거점 기능을 육성·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행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대도시 접근성과 공간계층구조에 의한 다양한 역할과 특성, 배후지역으로의 서비스 전달범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향후 중심지사업은 일선 지자체에서 사업 규모와 방식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별로 서비스 여건의 진단 기준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촌 중심지가 제공하는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세부 서비스 여건 중에서 불리한 항목을 선택적으로 육성·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중심지-배후마을 간 연계 형성을 위해 배후마을의 서비스 접근성과 세부 서비스 항목별 취약점 등 배후마을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내용) 농촌 중심지 진단 기준 및 중심지 유형 구분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먼저,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인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 중심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대도시접근성 및 인구규모에 따라 전국 농촌 지역을 분류하고,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지역 5곳을 선정한 후, 각 농촌 중심지 유형별 실태와 기능 진단 작업을 수행하였다.
 - 사례지역인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경북 의성군, 충남 공주시, 충북 단양군의 생활권 범위 및 주민 이동 패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기초생활서비스 4대유형별 특화지수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중심지 기능 진단 기준 및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책 제언) 농촌 중심지의 기초생활서비스 등급 및 인구비중 분위를 통해 농촌 중심지 계층 유형을 분류하고, 중심지사업 실행 시 해당 유형 기준에 따라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



- 1) 1계층 중심지: 기초생활서비스 상위등급 중에서 인구비중 1분위(20% 이상)와 2분위(10% 이상 20% 미만)에 속한 읍·면 지역임. 농촌생활권에서 수위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부분 군청소재지 및 이와 유사한 규모의 읍·면 지역에 해당함.
- 2) 2계층 중심지: 기초생활서비스 상위등급 중에서 인구비중 3분위(10% 미만) 및 기초생활서비스 중위등급 중에서 인구비중 2분위와 3분위에 속한 읍·면 지역임. 농촌 생활권의 중위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읍·면 지역에 해당함.
- 3) 3계층 중심지: 기초생활서비스 하위등급에 속한 읍·면 지역임. 개별 면 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작은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육성해야 할 지역임.

〈농촌 중심지의 계층 구분〉

농촌중심지 계층	등급	인구비중 분위	주요 대상
1계층 중심지	상위 등급	1분위	전체 67개: 일반 군 지역의 군청 소재지(47개), 일반 읍(11개), 면(1개) 도농복합시 읍·면 소재지(8개)
		2분위	전체 26개: 도농복합시 혹은 군 지역 읍(22개), 면(4개)
	중위 등급	1분위	전체 39개: 일반 군 지역 읍(30개), 면(9개)
2계층 중심지	상위 등급	3분위	전체 46개: 일반 군 지역 읍소재지(3개) 도농복합시 읍소재지(34개), 면 소재지(9개)
		2분위	전체 71개
	중위 등급	3분위	전체 253개
3계층 중심지	하위 등급	1·2·3분위	전체 902개: 면소재지(886개) 일반 군지역 읍(10개), 도농복합시 읍(5개)

- 농촌 중심지의 계층·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 생활권 중심지 재생(1계층 중심지)’, ‘농촌 커뮤니티 중심지 활성화(2계층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3계층 중심지)’의 세 가지 유형 사업으로 개편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역 단위의 3·6·5생활권 형성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을 수립하기 위해, 수위-중위-하위 중심지 계층 간 연계 및 중심지 간 차별화된 기능 분담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별 중심지 계층 유형 등 특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 내용에 입각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농촌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주체가 중장기 전략 하에 중심지 육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농촌중심지 계층별 사업 유형 제안〉

사업 유형	중심지 계층	사업 대상지 특성	중심지 육성 방향
농촌 생활권 중심지 재생	1계층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생활권 전체에 행정, 의료, 상업 등 서비스를 전달하는 수위 중심지 기능 담당 ■ 도농복합시의 시청소재지 혹은 일반 군 지역의 군청소재지 등이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비즈니스 활성화 및 기반산업 육성 거점 ■ 정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통한 중심지 재생 추진
농촌 커뮤니티 중심지 활성화	2계층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계층 중심지의 역할을 보완·분담하여 중위 중심지 기능 수행 ■ 복수의 읍·면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달 거점 기능 수행 ■ 대부분 읍소재지 혹은 변화한 면 소재지 등이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차원에서 수위 중심지와 의 기능 분담을 고려하고, 중위 중심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육성 ■ 중위 중심지의 부족한 서비스기능별 보완 육성
기초생활 거점 육성	3계층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면 지역 혹은 면 지역이 분할된 몇몇 마을 범위에서 일부 서비스 기능을 전달하는 작은 거점 기능 수행 ■ 대부분의 면 소재지 혹은 면 내의 변화한 일부 마을이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지역에 취약한 서비스부문별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SOC 기능의 복합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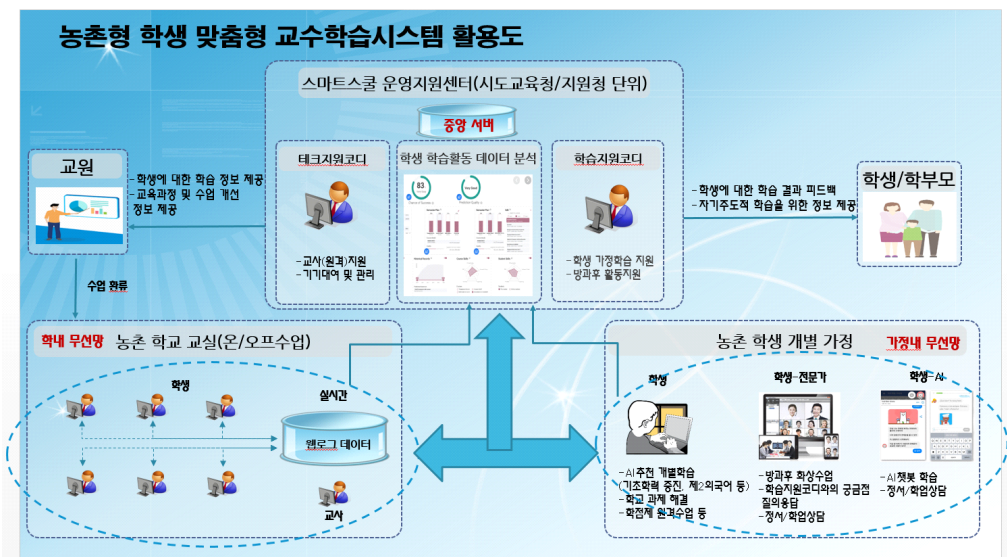
2.2.4. 농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 (배경) 도시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교육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단위학교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규모의 학생 수 확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결과, 이주를 희망하는 농촌 주민 중 40대의 경우 1순위가 자녀 교육 사유(24.2%)인 것을 보았을 때,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는 농촌교육 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을 구상하고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농간 교육격차 현황, 농촌교육 여건 개선 정책의 성과와 한계, 농촌 학교 활성화 사업 추진 사례 및 신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 학교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주요 내용) 1) 농촌교육 여건 현황 및 농촌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현황 파악 2) 국내외 농촌 학교 활성화 사업 추진 사례 분석 3) 신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4) '농촌형 공존스마트학교(CSS: Co-existence Smart School) 체제 모형', '농촌형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시스템 모형 및 운영 전략'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농촌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농촌교육 개선 정책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농어촌 정보화 사업 지원 정책 등이 있다. 학업성취 증대, 도·농 교육격차 해소 등의 일정 부분의 성과를 가져 왔으나 여전히 농촌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강원도 온마을학교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전원학교 사업, 전라북도 혁신교육협력지구 사업과 일본과 북미의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교 교육의 내·외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농촌교육 여건 개선 미비', '우수 교원 유치 및 지속적 근무 여건 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서울미래학교 창덕여자중학교, 퀘스트 투 런 스쿨, 비트라스쿨 등 데이터 기술 기반 교육 여건 사례 및 학습 분석 시스템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농촌의 마을(학부모 및 지역 사회 단체)이 교육의 협력자 또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학교구성원들의 변화 의지를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II.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 (정책 제안) 농촌 학교 활성화와 농촌 지역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AI기반의 통합적 ‘농촌형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시스템’ 운영 모형을 제안한다.
 - ‘농촌형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시스템 모형’은 ‘농촌 학생 학습 결손 방지 및 심화학습 제공’, ‘농촌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정보 제공’, ‘농촌 학교 교실 수업 개선’, ‘농촌 학생 개별 가정 지원’, ‘실시간 학습 현황 및 분석 결과 제공’ 등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이 농촌 지역 학교에 중·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학생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의 마련이 요구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플랫폼 도입과 함께 교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 교원 전체가 IT-literacy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교내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현행화를 위하여 농촌 지역 학교에 무선 AP 구축, 통신케이블 포설, 학습용 단말기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지역 사회 연계 학교 시설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농촌 학교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농촌형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모형〉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배경) 2015년부터 발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고, 농어촌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 2020년 ‘함께 꿈꾸는 행복 농촌’ 우수사례집에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을 발굴·조사하였다.
- (대상 사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구축, 경제·일자리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한 우수 사례 17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홍보 방안) 사례집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포스터(농촌 삶의 질 이야기)를 통해 각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 주요 내용

▣ 장애인과의 공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교, ‘사단법인 에제르’

- 평생교육원을 통해 지역 노인 및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루어지는 ‘장-노 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농민의 수익에 보탬이 되는 가공·판매 사업을 추진하였다.
- (주요활동) 발달장애아에 대한 직업 교육, 은퇴노인과 발달장애인이 공생하는 ‘장-노케어’ 모델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노인일자리 창출
- (키워드)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장-노케어

▣ 적극적인 사업 연계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충남아이키움뜰’

-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서 24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지자체 정책 연계 및 지역 내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주요 내용) 주·야간 시간제보육 서비스,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 제공, 충남 경찰청 및 흥성의료원과 협조 체계 구축
- (키워드) 24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유희공간활용

▣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안덕면 사랑의 집짓기’

- 민·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농촌 주거개선사업, 이웃 나눔 실천 사업, IOT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사랑의 집>이라는 빈집 정비 사업 실시, 취약가구 및 무주택자에게 빈집 제공. IOT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도시락 배달, 노인·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사업
- (키워드) 농촌 빈집 및 폐가 정비,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 제천 수물마을 복사꽃의 기적 ‘도화마을’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환경 개선 사업, 경관가꾸기, 공동체 소득 사업 등을 지속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수몰된 옛 도화리 경관 복원을 위해 퇴비 정리, 마을 안길 정비, 꽃동산 조성 등 다양한 정비 활동 실시
 - (키워드)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 귀촌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공동체 소득 ‘박하향기협동조합’

- 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박하를 재배하고 가공제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관을 정비하였다.
 - (주요 내용)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900평)를 개간하여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박하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성
 - (키워드) 경관 가꾸기, 농촌 창업

□ 더불어 잘사는 마을이 되고자 시작한 마을기업 ‘연호마을’

- 연호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보리축제를 시작, 마을기업 연호를 만들고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였다.
 - (주요 내용) 마을경관 개선 활동, 축제 기획, 마을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배달, 작은 편의점 점방, 마을요양원 설립 준비
 - (키워드) 농촌 축제, 마을 공동체, 정주환경 개선, 마을환경개선

□ 문화장벽을 허물다. LOVE IN DMZ, ‘레클리스협동조합’

- 다문화카페를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마을주민들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 (주요 내용) 다문화카페 운영, 문화체험, 멘토링 프로그램등에 다시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 (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 귀농과 협동조합, 정년없는 인생 2막의 출발점 ‘풀개 협동조합’

- 제주도에 정착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해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귀농인 멘토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내용)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원들과 함께 유기농 감귤, 블루베리를 생산, 그 외 각종 체험프로그램, 귀농인 교육, 사회적 농업을 운영
 - (키워드) 귀농·귀촌, 협동조합, 6차융복합사업, 스타팜, 체험농장, 사회적농장

□ 지역농가가 생산하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입히다 ‘보령우유 농업회사법인’

- 지역 축산농가들을 조직화하여 유기농우유 생산체계를 만들고, 가공 및 체험프로그램, 판매장 운영 등 유제품 6차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 (주요 내용) 유기농우유와 그에 필요한 유기 사료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과 판매를 위한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마케팅 및 체험프로그램까지 연계
 - (키워드) 6차 산업, 지역 생산체계, 농촌체험프로그램, 농촌관광

□ 연(蓮)과 함께하는 두마을 이야기 ‘원연장마을, 울미연꽃마을’

- 원연장마을과 울미연꽃마을의 주민들은 연(蓮)을 이용한 가공품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경험으로 삼아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원연장 마을은 다양한 연(蓮) 관련 상품을 만들어 마을 특산품으로 판매, 울미연꽃마을은 연한과 만들기, 연잎우산소낙비 놀이 등 체험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
 - (키워드) 마을경관개선, 마을만들기, 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농촌체험농장



□ 지역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충북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기획, 수행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지역 자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개발사업,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기획 사업, 문의에 문의하세요(투어 프로그램), 문의 맛남의 장(오일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 (키워드) 로컬 크리에이터, 농촌 청년 창업, 지역 활성화, 농촌 일자리

□ 청년과 상생의 힘으로 변화하는 ‘WOW 미탄’

- 다섯 농가가 마을과 연계해 미탄면을 찾은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미탄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주요 내용) 계절별 ‘미탄 소풍’(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각 행사마다 판매장을 만들어 미탄면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키워드) 농촌 청년 일자리, 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농촌체험농장

□ 할머니 화가들이 그려내는 농촌의 삶 ‘신풍미술관’

- 신풍미술관의 ‘할머니 그림학교’는 2010년 지역 노인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 평균연령 80세 이상인 할머니들이 그림을 통하여 노년기 우울증 예방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주요 내용) 마을 할머니 그림학교, 마을 벽화, 실버페스티벌, 미술관 내 전시회 등 작품 및 동아리 활동
 - (키워드) 미술치료, 치매예방, 실버페스티벌, 농촌미술관

□ 농촌 빈집을 마을단위 문화 거점으로 바꾸다 ‘완주문화재단’

- 완주군 내의 빈집을 예술인 거주 레지던시로 이용,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주민들

과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내용)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의 문화 거점을 만들고,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키워드) 농촌 빈집 정비, 마을공동체, 농촌 문화 공간

□ 지역과 밀접한 문화복지, 문화교육의 플랫폼 ‘행촌문화재단’

- 행촌문화재단은 행촌미술관, 이마도작업실, 수운아트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과 밀접한 예술전시 및 문화복지, 문화교육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 (주요 내용) ‘행촌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회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수운아트센터’에서는 가드닝, 요리, 농사 등 농촌형 체험교육 진행
- (키워드) 문화 복지, 농촌 교육, 유희시설 활용

□ 교육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의 답을 찾다 ‘화천군’

- 학비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공교육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학습관 운영 등 적극적인 교육여건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 (주요 내용) 대학 무상교육, 해외 연수 지원, 도서관·화천학습관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셔틀버스 제공 등 교육여건 개선 활동 추진, 온종일 돌봄서비스 준비
- (키워드) 농촌 방과후학습, 농촌형돌봄, 학교연계프로그램, 무상교육, 통학지원 버스

□ 민통선 안의 작은 농장, 3D 프린터로 미래를 꿈꾸다 ‘한빛스쿨팜’

- 3D 프린팅을 접목한 체험 농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 학교에서 3D 프린팅 수업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주요 내용) 3D 프린팅을 접목한 체험 농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철원 관내 60% 이상의 학교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강의를 진행
- (키워드) 농촌교육, 3D프린팅, 체험 농장, 농촌 방과후 프로그램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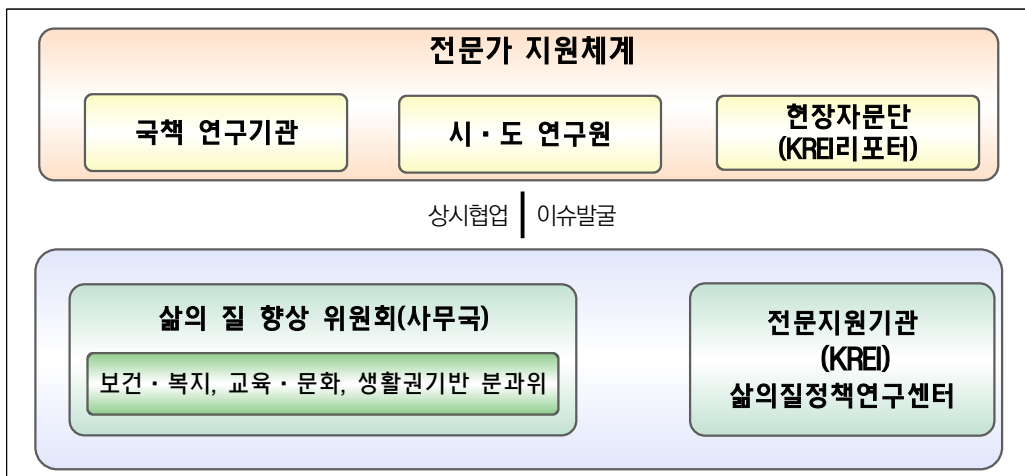
-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 · 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도에 협약을 맺고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농촌 현장의 여론,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각 일원이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농촌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7개의 국책 연구원, 9개의 시·도 연구원, KREI리포터로 이루어진 현장자문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주요 추진 내용

□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 개요

- 일시: 2020년 6월 30일 (화) 14:30~17:30
- 장소: 서울 aT센터 그랜드홀
- 주최 및 주관: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주요 내용〉

- 이번 농어촌 지역 정책 포럼은 난개발로 인해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구 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 농촌 지역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도시지역 내 입주하는 공장이 난개발의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 농촌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정비 담당팀을 만들고 관련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다(성장관리지구 지정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다.
- 90년대 이후부터 농촌 마을에 주거시설, 공장,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혼재되거나 난개발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 합리적인 계획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이 사는 마을 따로 축사 따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따로 분리하여 집적화하였겠지만, 현재 마을과 근접한 곳에 신재생에너지, 축사, 공장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 과소화, 고령화와 관련된 농촌주거문제가 농촌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편의를 위한 포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농촌지역에 축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 수질오염 총량에 도달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한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모든 개발이 중단되었고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군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때 농촌주민의 활동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공간체계를 잡을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 또한 농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들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 돌아오는 농촌보다는 떠나지 않는 농촌정책이 필요하다.
 - 농촌 마을의 노후화 때문에 농촌개발사업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 농촌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다소 왜소한 지자체들이 공동협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 2020년에는 본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각 1회씩 개최되었다.
- 2020년 2월 제19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안건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였다.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의료·복지 개선, 정주여건 조성 등에 대한 사항과 최근 농어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포함하였다.
 - 국가차원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에 접근성 측정 항목을 신설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미흡한 지역에 각종 정책·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 및 절차, 대상 정책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2020년 6월에는 정기 심의·보고 사항 관련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 안건은 2019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201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및 농진청에서 작성한 2019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였다.
- 2020년 12월에는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 일시: 2020년 12월
 - 논의 안건: ①지역사회 통합돌봄(정신장애인 분야)과 사회적 농업 연계 방안

② 농업인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 방안(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

- 전문지원기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및 농업인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 방안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수 있도록 도입 관련 안건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안건별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 개요

- 2018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농촌에 관한 관심을 환기 시키려는 목적으로 '농촌 삶의 질 이야기'라는 이름의 포스터를 자체적으로 기획·발간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자체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한다.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축적된 조사연구 내용,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 지자체 공무원, 지역 활동가, 농업·농촌관련 연구자에게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발간된 포스터는 각 시·군 삶의 질 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 삶의 질 정책지원 연구네트워크(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현장자문단,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KREI 통신원과 리포터 등에게 배포한다.
- 2020년에는 8호를 시작으로 12호까지 총 5개 포스터가 발간되었다.
 - 1호: 농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2018.7.)
 - 2호: 청년, 농촌에서 즐거운 삶을 꿈꾸다. (2018.8.)
 - 3호: 없어서는 안될 농어촌 학교 (2018.10.)
 - 4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서 시작한다. (2018.12.)
 - 5호: 주민들은 농어촌에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2019.1.)
 - 6호: 농촌 주민의 삶 터(據), 현재 주거 여건은 어떠한가? (2019.3.)
 - 7호: 농어촌 공공서비스, 어떻게 제공되고 있을까? (2019.6.)
 - 8호: 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 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2020.2.)
 - 9호: 사람을 보듬은 농촌, 사회적 농업 (2020.3.)
 - 10호: 농촌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주민들이 만든다 (2020.4.)
 - 11호: 미래 지속가능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영·유아 보육에서 시작한다 (2020.6.)
 - 12호: 농작업안전재해,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의 연계가 중요하다 (2020.11.)

❖ 주요 추진 내용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8호

- (제목) 최근 농업 분야에 나타난 고용 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구성)
 - 최근 농림어업 고용 동향
 - 다양한 분야의 <농업법인>, 새로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다.(사례)
 - * 농업회사법인(주) 본프레쉬
 - * 가나다라 브루어리
 - * 제주 공심채 농업회사 법인
- (내용)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동향과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 구분되는 현재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 현상 및 특성을 살펴보고, 현장 사례를 통해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 1998년 이후 약 20년 만에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2017년 3분기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18년에는 1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6.2만 명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13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5만 명이 증가하였다.
 - 2000년대 이후 지난 16년간 농가 중심의 종사자 수(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법인 종사자 수(외국인 제외)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5년 이후 농업회사법인 수 또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 (주) 본프레쉬는 다양한 품종 개발을 통해 농업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연구한 기술을 재배 농가와 함께 나누며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힘쓰고 있다.
 - 가나다라브루어리는 서울에 사는 청년을 경북지역 일터와 연결시켜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문경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존 농산물 가공사업에 수제맥주 체험공간을 결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농촌



관광콘텐츠 제시 모델이 되고 있다.

- 제주 공심채 농업회사법인은 농촌 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힘쓰고 있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9호

○ (제목) 사람을 보듬은 농촌, 사회적 농업

○ (구성)

- 사회적 농업이란?
- 사회적 농업, 왜 중요한가?
- 돌봄서비스 공급 주체 부족 및 취약 계층의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
 - * 충남 홍성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 * 전남 영광 '여민동락'
 - * 인천 강화 '콩세알'

○ (내용)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배제를 겪는 이들을 농업을 기반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 어촌 조성'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포함되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 시설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특히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적 농장은 취약 계층에게 주간 돌봄 서비스, 교육 및 작업장,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고, 농장 안에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하여 '사회화' 및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실현이 가능하다.
- 농촌지역의 개별 농가들이 농업의 생산기능에서 나아가 사회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 돌봄,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면, 돌봄 서비스의 부족이나 인프라 부재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 충남 홍성 '행복농장'은 만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여 재활을 돕는다. 초기에는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농장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지역 주민들과 이들이 관계를 맺고 어울려 가며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젊은협업농장'에서는 농부의 꿈을 가진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농촌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파종부터 판매까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전남 영광 '여민동락'은 귀촌한 부부가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면서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시잎떡공장을 설립하였다. 또한 귀농인들에게는 시기별 재배작물 교육과 농사실습, 사회적농업과 6차 산업 교육, 지역융화마을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인천 강화 '콩세알'은 지역 내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친환경 농가 지원, 고령인 및 귀농·귀촌인농업활동 지원,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농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0호

- (제목) 농촌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주민들이 만든다
- (구성)
 - 여전히 낮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부문 만족도
 - 농어촌 주민의 주된 문화·여가 활동과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
 - 농어촌 주민이 느끼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선 사항
 - 농어촌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우수 사례
 - * 모동작은도서관
 - *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 (내용) 문화 및 여가활동은 삶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해준다. 하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문화·여가 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하



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지 못한 ‘문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농어촌 문화·여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 2019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는 경제·일자리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 40대 이하에서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문화 예술 관련 활동] 및 [스포츠 관련 활동]이 전체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여가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농어촌 주민이 느끼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30.2%), ‘비용이 부담된다’(25.1%)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 모동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고 빌리는 공간이 아니다. 주민들은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1년 내내 직접 운영하며 카페와 동아리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유희시설이 어떻게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 제주소도리문화연구소는 이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라디오, 독립영화 상영, 영화제 기획, 타지역 예술가를 섭외하여 원데이클래스를 기획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1호

- (제목) 미래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영·유아 보육에서 시작한다
- (구성)
 - 농어촌 영·유아 보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 농어촌에서는 어떤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에서 시행 중인 보육·육아 정책
 - 농어촌 영·유아 보육 우수 사례
 - * 장흥 신나는 놀이터 어린이집
 - * 원주 손가락 육아공동체
- (내용) 농촌 인구 공동화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인구 유입 및 정착이 중요

해지면서 농촌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 영·유아 보육 환경을 살펴보고,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보육 서비스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 영·유아 가구원 수에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가구원이 5명 이상인 영·유아 가구 비율이 높았다.
- 농어촌 영·유아 보육 방법으로 '부모가 돌봄'(50.1%),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 이용'(48.4%)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 이외 가족(조부모, 친인척)이 돌봄'(1.4%)비율은 도시(9.3%)에 비해 크게 낮았다.
- 농어촌 영·유아 보육의 어려운 점으로 도시보다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 부족'(26.2%) 응답률이 크게 높았고, 이어서 '자녀 놀이나 학습 관련 정보 부족'(19.3%),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의 질 낮음'(12.5%)를 꼽았다.
- 농어촌에서 시행 중인 보육·육아 정책으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동식 놀이교실 등이 지원되고 있다.
- 장흥 신나는 놀이터는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젊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자 하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이들이 추구하는 자연 속 자유로운 신체활동 및 놀이 교육은 농촌이기에 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 방식이기도 하다.
- 손가락 육아공동체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가구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자발적으로 모임을 시작하여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2호

- (제목) 농작업안전재해,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의 연계가 중요하다
- (구성)
 - 농작업재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 농작업재해의 실질적인 대비방안은?
 - 사례로 본 농작업안전재해 사전예방의 중요성
 - 시사점과 과제



- (내용)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는 농작업 안전예방 관리가 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고령화 추세가 심각해지면서 농작업 재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농작업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도입하여 사후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예방 정책을 개선하고자 했다.
 - 농림업 재해율은 0.97%, 인구 1만 명 대비 사망자 수 1.52%로 전산업과 비교했을 때 재해율은 1.66배, 인구 1만 명 대비 사망자 수는 1.41배 높은 고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 최대한 농작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농작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사후보상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 간에 급부별로 요구하는 보상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농친화상품, 중장년농친화상품 등 각 농업인 특성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맞춤형 사후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